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김 명 상

2023년 12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양 덕 순 · 김 주 경

김 명 상

이 논문을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2월

김명상의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3년 12월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7
3. 연구방법	9
II. 이론적 고찰	10
1. 갈등의 일반 개요	10
1) 갈등의 개념	10
2) 갈등의 유형	13
3) 갈등의 원인	14
4) 갈등의 전개과정	15
5) 갈등조정방법	17
6) 갈등영향요인에 관한 이론	21
2.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	27
1) 지역공동체의 개념	27
2) 지역공동체의 특징	31
3) 선주민과 정착주민에 대한 이해	34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공동체 현황	39
3.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영향요인	40
1) 제도적 요인	41
2) 행태적 요인	42
3) 경제적 요인	43

4) 사회문화적 요인	44
5) 지역성	46
4. 선행연구 검토	48
Ⅲ. 연구설계	53
1. 연구모형의 설계 및 가설설정	53
1) 연구모형의 설정	53
2) 가설설정	54
3) 연구의 대상 및 표본의 특성	55
2. 연구방법 및 측정항목	59
1) 연구방법	59
2) 측정항목의 구성	61
Ⅳ. 분석결과	65
1. 선주민 분석결과	65
1) 기술통계 분석결과(선주민)	65
2) 신뢰도 분석 결과(선주민)	69
3) 타당도 분석 결과(선주민)	70
4)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선주민)	72
5)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선주민)	73
2. 정착주민 분석결과	76
1) 기술통계 분석결과(정착주민)	76
2) 신뢰도 분석 결과(선주민)	80
3) 타당도 분석 결과(선주민)	80
4)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선주민)	83
5)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선주민)	83
3.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비교 분석	86

1) 기술통계	86
2) 구조방정식 모형	89
V. 결론	91
1. 연구결과 요약과 정책적 제언	9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94
【참고문헌】	95
【ABSTRACT】	0
【부록】 설문지	97

표 목 차

<표 II-1> 선행연구 요약	51
<표 III-1> 선주민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56
<표 III-2> 정착주민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58
<표 III-3> 측정항목 및 참고문헌(선주민)	62
<표 III-4> 측정항목 및 참고문헌(정착주민)	63
<표 IV-1> 제도적 요인 기술통계 결과(선주민)	65
<표 IV-2> 행태적 요인 기술통계 결과(선주민)	66
<표 IV-3> 경제적 요인 기술통계 결과(선주민)	67
<표 IV-4> 사회문화적 요인 기술통계 결과(선주민)	67
<표 IV-5> 지역성 기술통계 결과(선주민)	68
<표 IV-6>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 기술통계 결과(선주민)	69
<표 IV-7> 측정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선주민)	70
<표 IV-8> 측정변수의 타당도 분석 결과(선주민)	71
<표 IV-9>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선주민)	72
<표 IV-10> 가설분석 검증결과(정착주민)	74
<표 IV-11> 제도적 요인 기술통계 결과(정착주민)	76
<표 IV-12> 행태적 요인 기술통계 결과(정착주민)	77
<표 IV-13> 경제적 요인 기술통계 결과(정착주민)	78
<표 IV-14> 사회문화적 요인 기술통계 결과(정착주민)	78
<표 IV-15> 지역성 기술통계 결과(정착주민)	79
<표 IV-16>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 기술통계 결과(정착주민)	79
<표 IV-17> 측정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정착주민)	80
<표 IV-18> 측정변수의 타당도 분석 결과(정착주민)	82
<표 IV-19>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정착주민)	83
<표 IV-20> 가설분석 검증결과(정착주민)	85
<표 IV-21>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요인별 인식 비교	87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 흐름도	8
<그림 III-1> 연구모형	53
<그림 IV-1> 경로분석 결과(선주민)	74
<그림 IV-2> 경로분석 결과(정착주민)	84

국문초록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지역은 입법, 재정, 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지역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인구에서도 큰 변화를 보였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인 2005년 제주지역의 인구는 557,235명이었으나, 2022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678,15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10년대 이후부터 연예인들의 제주살이가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면서, ‘제주살이’가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이 ‘제주살이’를 꿈꾸고 동경하게 되면서 제주로의 인구 유입은 한층 더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지속되었던 제주의 순유입 인구증가는 8년만인 2019년이 되고 순유출 증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021년 발표된 ‘제주 정착주민 기본계획(2022-2025)’에서는 정착주민 중 70%가 넘는 사람이 4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재이주하고 있었으며, 그 중 핵심생산인구인 20~30대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착주민의 21.1%만이 제주에 정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며, 나머지는 다시 이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의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주민 276명과 정착주민 100명, 총 27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SPSS 25와 AMO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갈등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선주민과 정착주민 모두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의 관계에 지역성이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선주민과 정착주민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갈등의 발생여부와 관계 없이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는 한계도 있다. 향후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된다면, 지역공동체 화합에 관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제주특별자치도, 갈등영향요인, 지역공동체, 선주민, 정착주민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지역은 입법, 재정, 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지역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것은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주만의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미래를 제주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대한 중앙정부와 제주지역의 입장은 각각 다음과 같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제주도가 지방분권의 실험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제주지역 차원에서는 지역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철학은 자율적 결정권이다. 제주지역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유·무형 자원들을 활용하여 지역의 미래를 지역의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의 정부가 추진해 왔던 지방분권의 수준을 뛰어넘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방주 수준까지의 분권을 고려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치도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제주라는 지역은 대한민국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섬이라는 지리적 특징으로 인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육지부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독자성이 강한 지역이다. 정부에서는 제주의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제주도가 이상적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자치모범도시로 육성해 보고자 하였다. (강창민·양덕순, 2014). 이에 제주도는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제주특

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7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분권모델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역할 수행으로 2023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제주지역은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지역내 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¹⁾은 2005년 7조9660억원에서 2020년 19조 616억원으로 약 2.3배의 큰 성장을 이루었으며²⁾, 제주 도내 사업체의 수는 2004년 42,531개에서 2021년 96,131개로 약 2.2배 이상 증가하였다³⁾. 인구에서도 큰 변화를 보였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인 2005년 제주지역의 인구는 557,235명이었으나, 2022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678,159명으로 7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⁴⁾.

이와 더불어 우리는 최근 4차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광범위한 곳에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체계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강영훈, 2004).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은 제주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영어교육도시와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조성되게 되면서 도내로의 인구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대 이후부터 유명 연예인들의 제주살이가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면서, ‘제주살이’가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제주살이’를 꿈꾸고 동경하게 되면서 제주로의 인구 유입은 한층 더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로의 인구집중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의 인구부족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귀농과 귀촌정책을 추

1)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1년 동안 지역 내 생산액, 단가, 물가 등의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생산측면 부가가치를 통계청에서 추계한 자료이다. GRDP는 지역의 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며,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GRDP가 높으면 그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GRDP가 낮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부터 광역 시·도의 GRDP를 산출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는 GRDP 잠정 수치를 익년말에 공표를 하고, 익익년 8~9월 사이에 확정치를 공표하고 있다.

2)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3) 제주통계포털(<https://www.jeju.go.kr/stats/index.htm>)

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진해 왔다. 도시에 살던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주를 통하여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있으며, 이주를 통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1차산업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기대 또한 이주를 결심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으로 인하여 매년 촌으로 이주하는 인구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촌으로의 이주는 과거와 그 목적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고 있다. 과거에는 직업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귀농 인구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귀농보다는 귀촌을 위한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주의 목적이 바뀌게 되면서 이주를 하고는 연령층 또한 낮아지고 있다. 귀촌을 하는 인구의 50% 정도를 20~30대가 차지할 정도이다. 이주를 통해 새롭게 유입된 활동인구는 지역 내에 이전과 다른 문화를 유입시키며,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다. 귀촌을 택한 젊은 연령대의 이주민들은 도시에서의 생활에서 벗어나 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택하면서 연고지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자신의 거주지를 결정하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정주기반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유상춘, 2022). 이러한 자유로운 거주지의 선택과 이동은 지역의 문화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선주민과의 인식과 충돌을 일으키며 이들 사이의 갈등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과거 갈등이란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갈등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다툼으로 공론화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고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듯 갈등의 순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는 인식이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분야에 있어서 갈등관리가 시작되었다. 15년의 시간이 흐르며, 우리나라의 갈등관리 수준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증가하고 심각성 또한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으며, 갈등관리뿐만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공갈등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간접

적인 이해관계자들까지 개입을 하며 갈등의 양상이 복잡한 형태를 띄고 있어 그 해결에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강민·김주경, 2023).

일반적으로 경계를 옮겨 사는 것을 ‘이사’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미디어 등에서 제주로의 이사하는 것은 ‘제주 이주’라고 표현을 많이 하며, 더 과감하게 표현하면 ‘제주 이민’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제주가 육지부와와의 거리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과 구별되는 지리적·문화적 차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때문에 제주로 이주를 하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큰 결단이 요구된다(정은재, 2022). 최근에는 도시를 찾아 떠나는 것 보다는 귀촌을 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1970~80년대부터 귀촌을 하는 문화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역도시화 현상(Counter-urbanization)은 201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읍·면·동 간의 인구이동에 있어서, 동에서 읍·면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과거보다 증가하여 읍·면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사람의 수보다 많아졌다. 또한 도시민들의 귀촌 의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점차 그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전형준, 2023).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도시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이주를 하는 것은 은퇴기를 맞이한 50~60세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제주로의 이주는 경제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성향을 보이는 30~40세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주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로 이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문화 이민자’라고 불릴 정도로 제주 문화생활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제주의 지방색을 지키고 동화되어 ‘제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주민들이 많다. 이러한 이주민들의 모습은 이주민들 또한 제주의 지역사회에 소중한 자산이 된다고 평가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 내 정착문제,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사회경제적 갈등,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한 문화갈등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있어 큰 부담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염미경, 2019).

이러한 지역공동체 내에서 선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은 인구 유입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1년 이후 지속되었던 제주의 순유입 인구증가는 8년만인 2019년이 되고 순유출 증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정은재, 2022).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4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21).

2021년 발표된 ‘제주 정착주민 기본계획(2022-2025)’에서는 정착이주민 중 70%가 넘는 이주민이 4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재이주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핵심생산인구로 보고 있는 20~30대 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착이주민 중 21.1%만이 확실히 제주에 정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다시 이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오누리 외, 2022).

이주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으로 유입되어 기존에 살던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를 통하여 인구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피 정책으로 보이며, 이러한 유치과정에서 정착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은 기존 선주민들에게 상대적 소외감을 주기도 하며(전형준, 2022), 이러한 원인으로 선주민과 정착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2) 연구의 목적

20세기 후반부터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시작되며, 근대적 흐름에서 벗어난 탈근대적 삶을 지향하는 문화가 정착되며, 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이주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근대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주의 형태는 경제적 동기에 따른 이주로, 이는 농어촌지역에서 도시로의 이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의 이주는 이와 반대로 농어촌지역으로의 이주가 늘어나는 추세이다(한지은 외, 2021). 특히 제주지역으로의 이주는 201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제주로의 이주는 동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전과는 달리 읍·면 지역에도 고르고 이주하는 특징을 가진다.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들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을 분석하고 선주민과 이주민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순유입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

여 제주에는 다양한 사회 변화가 나타났다. 이주민들은 도내 곳곳에 생활터전을 잡고 지내면서, 지역공동체 내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4년부터 정착주민과 관련하여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이고 빠르게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이주민과 관련하여 선주민과의 갈등에 기인한 제주 적응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선주민들은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고, 개발활동으로 인하여 거주 환경이 크게 훼손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7년 기존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단순히 이주민들을 지원하기 보다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공동체 내에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염미경, 2019).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2023년 11월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제주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제주에서 모두 1088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다. 이런 상태로 연말까지 지속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인구는 14년 만에 순유출을 기록하게 된다. 순유출은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은 것이다. 제주도 인구는 2009년 1015명이 순유출됐으나, 2010년 437명의 순유입을 기록한 뒤 지난해까지 지속해서 인구가 유입됐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은 ‘제주 이주’ 열풍이 불면서 해마다 1만1천~1만4천명 안팎의 인구가 유입돼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와 교통 문제,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제주도 내 순유입 인구는 2012년 4876명, 2013년 7823명에 이어 2014년 1만1112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고, 2016년 1만463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기 시작해 2017년 1만4005명, 2018년 8853명으로 유입 폭이 감소했다. 2019년엔 순유입 인구가 2936명으로 2016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도 순유입 인구가 3148명에 머물러 2016년과 비교해 4분순유입에 제주도 인구는 2010년 54만7917명에서 2015년 59만9252명으로 5년 새 5만1천명 이상이 늘었고, 2016년에는 61만8119명으로 6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8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70만명을 넘는 70만80명으로 집계됐다. 인구의 순유출은 젊은층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2023. 11. 21.자 기사⁵⁾)

5) 살고 싶던 땅 제주, 14년 만에 인구 순유출 코앞. 한겨레신문 2023. 11. 21.자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117288.html> <검색일 : 2023.11.30.>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의 여파로 인하여 최근 제주지역으로 이주하는 순유입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주민이 줄어든다고 하여 지역공동체 내 갈등이 사라지는 않을 것이다(한지은 외, 2021). 따라서,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한다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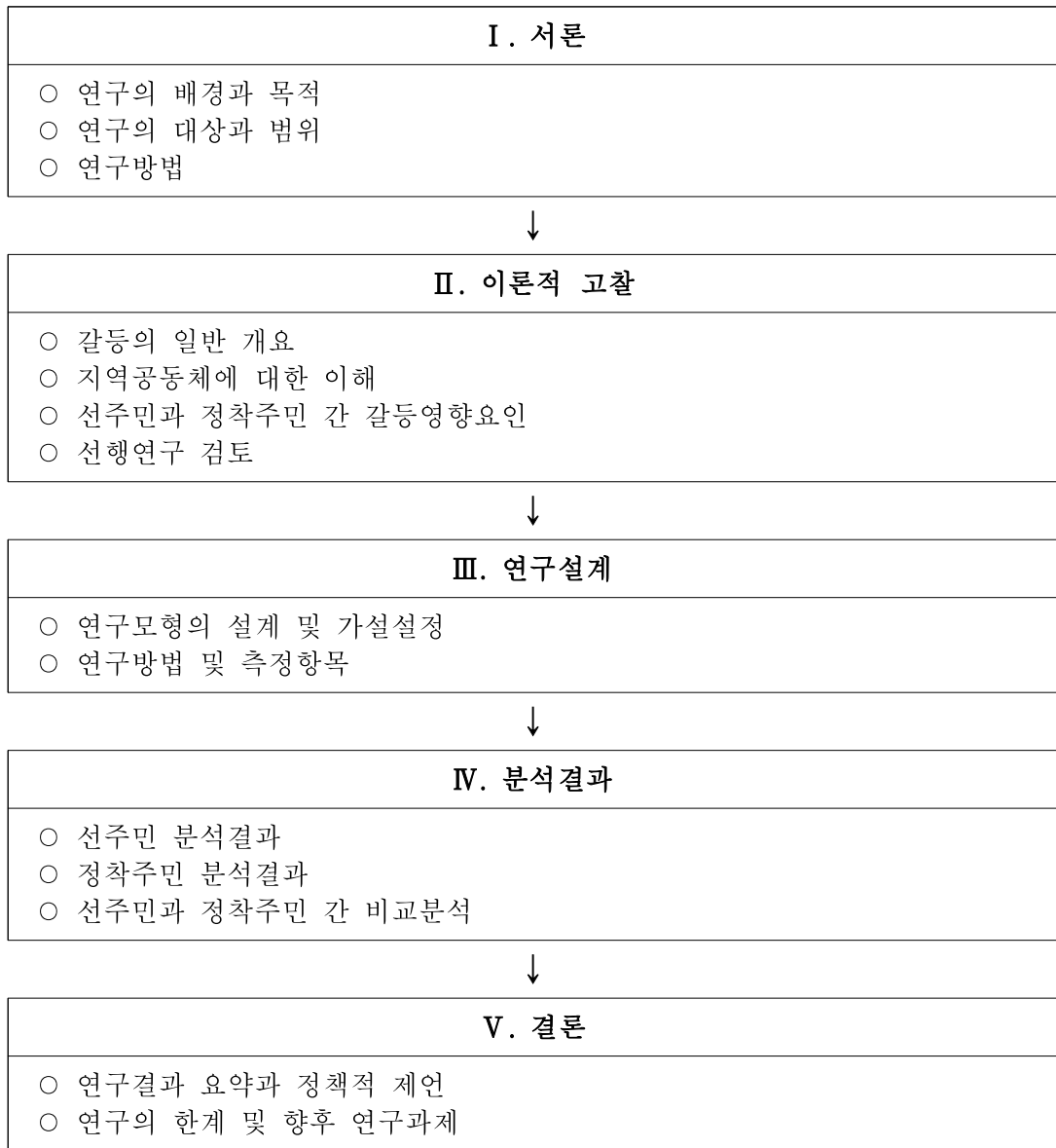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선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현재 제주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이다. 제주의 선주민과 정착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 사이의 갈등영향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진행되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대상과 범위,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제2장은 이론적 고찰로서 연구의 틀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해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첫째, 갈등의 일반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둘째, 지역공동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세번째로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영향요인을 검토하였는데,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제도적 요인, 행태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지역성, 지역에 대한 애착을 선정하였다. 넷째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선주민과 정착주민에 관한 선행연구,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제3장은 연구설계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분석방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영향요인을 찾기 위한 연구모형을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제시한다. 제4장은 분석결과로서 실증분석을 통해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한 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영향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I-1]과 같다.



[그림 I-1] 연구 흐름도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주민과 정착주민 사이에 어떠한 요인이 갈등을 발생시키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국내 및 해외 관련 논문과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선주민과 정착주민의 갈등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다.

둘째,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2023년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적 특성을 제외하고 제도적 요인 4문항, 행태적 요인 5문항, 경제적 요인 5문항, 사회문화적 요인 6문항, 지역성 5문항,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Google Form을 활용하여 선주민과 정착주민용 설문지를 각각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선주민 276부, 정착주민 100부 회수되어 총 27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은 IBM의 사회과학용 통계 패키지인 SPSS 25(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5)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후 실증분석은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을 실시한 후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갈등의 일반 개요

1) 갈등의 개념

갈등(conflict, 葛藤)의 사전적 정의는 칩과 등나무라는 의미이다. 어떠한 일이나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서 화합하지 못하는 상태를 비유할 때 갈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현실에서도 서로 대립하는 의견이나 상황,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충돌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갈등은 상호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들 사이에 상반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Brown, 1983). 이 때 둘이나 둘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상반된 선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수반되기도 한다(Carnevale & Isen, 1986). 이 과정에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상대방을 방해하여 좌절시키려고 하고, 상대방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기도 한다(Robbins, 1983).

서양적 어원에 따른 갈등은 라틴어 ‘confligere’에서 유래하였다. 이는 함께를 의미하는 ‘con’과 충돌, 부딪침, 다툼을 의미하는 ‘fligere’이라는 용어가 결합된 것이다. 즉, 갈등(conflict)은 ‘둘이나 둘 이상의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목표가 양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호 작용을 하는 역동적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은 갈등적 존재이다(homoconflitus)’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말이 인간 사회 속에서 갈등이 갖는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갈등이라는 단어는 원래 심리학에서 사용되던 것으로, 개인의 정신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내적 조화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상태는 두 개 이상의 상반되는 모습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어떠한 행동을 해야할지 결정을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Mifflin, 2000). 동·서양의 갈등을 보는 관점도 조금씩 다른데 서양은 외면적 의미를 강조하는 반면 동양은 내면의 심리적 의미를 강조한다.(박효준, 2023)

갈등은 개인 간, 집단 간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한 사람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 갈등은 행정학을 비롯한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정책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루고 있지만 학문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행정학적인 의미에서 갈등이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선택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곤란한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개인적인 갈등과 복수의 의사 주체 사이에서의 갈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정학에서의 갈등은 이 중 조직이나 집단 차원에서의 갈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갈등은 둘 이상의 행동 주체 사이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나 목표가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희소한 가치의 획득을 둘러싸고 발생하기도 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갈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둘 이상의 강한 동기(motive)유발이라고 정의한다(Thomas, 1976). 개인에게 있어 두 가지 이상의 선택상황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겪게 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며 주로 인간내면의 심리특성에 관심을 갖는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조직, 계급 또는 계층 간 갈등에 관심이 높은 편이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social conflict)은 상대방 집단을 제거하거나 무력화 시켜 권력, 가치 그리고 지위 등의 희소한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박호숙, 2000).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희소성 있는 가치자원을 둘러싸고 서로 경쟁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로 자원의 배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이 이루어진다(박효준, 2023).

이처럼 갈등은 다루어지는 학문의 종류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는데 개인 안에서의 내적 갈등은 주로 심리학 등에서 다루는 영역이며 일반적으로 행정학에서는 외적 갈등을 주로 다룬다. 따라서 행정학이나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갈등은 둘 이상의 주체들의 상호작용 과정이다. 이들 사이에 양립 불가능한 목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상호 간의 대립감과 대립적 행동을 내포하는 역동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을 갈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장동운, 1997).

갈등에 동일시간이라는 시간적 관념을 포함하는 견해도 있는데 Edward(1968)가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여 갈등을 설명하였다. Edward에게 있어서 갈등이란 동일한 시점에서 최소 둘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배타적인 행동을 하는 심리적인 상황인 것이다.

갈등을 정의하기 위하여 특징적인 조건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Baron(1990)은 갈

등의 상황과 그 양상에 의하여 갈등을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였다. Baron은 갈등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에 대하여 다소 추상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갈등은 서로 간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간 반대되는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갈등상황에 포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갈등의 이해관계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넷째, 갈등은 서로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과거 상호작용 해왔던 부분들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갈등은 일방 또는 쌍방 모두에 의하여 다른 이해관계자의 목표를 좌절시킬 수 있는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다(구길두, 2021).

위에서 살펴보았던, 갈등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갈등은 가치를 둘러싼 인간의 선택과정에서의 내적 또는 주체 간 대립상황으로 정의해 볼 수 있으며 행정학적 관점에서 갈등은 희소자원 또는 가치를 둘러싼 둘 이상의 행동주체들이 목표가 양립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립적 양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상 생활속에서 우리는 갈등과 분쟁을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사용하고 있지만 분쟁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의견이 불일치한 상태로 양립되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외부로 표출된 의견불일치와 사회적 갈등이라는 특성을 지녀 갈등과는 다소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있다(환경부, 1996)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강력히 추진한 경제개발정책에 따라 공업화정책은 더욱 힘을 입었으며, 그로 인해 시작된 고속도로, 항만, 댐 등의 건설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밀도에 비해 협소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간척사업, 개간사업 등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환경에 대한 가치와 개념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피해를 받게되는 지역 주민들도 개발이라는 것은 국가의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에 휘둘리며 국가의 개발정책을 수용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환경문제는 결국 현대에 들어와서 다양하게 표출되어지고 있다. 개발과정에서부터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져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발 계획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기도 하며, 심할 경우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입기도 한다.

1980년대 말 이후로 접어들면서,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민주화,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시민사회에 대한 이념과 가치에 따라 빠르게 조직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시민과 지역주민의 권리의식도 신장되었고, 우리 사회의 정보 순환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높아졌으며, 시민들의 참여의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개발과 성장 위주의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나라의 관료사회 아직 시민의식만큼 변화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이고, 비밀스럽고 비민주적인 모습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눈높이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모습은 갈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갈등의 유형

갈등의 발생원인은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실관계에 따른 갈등이다. 이 갈등은 사건, 자료 등 사실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사실관계 갈등을 말한다. 두 번째는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다. 이 갈등은 한정된 자원 등을 분배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말한다. 세 번째는 구조적 갈등이다. 구조적 갈등은 왜곡된 제도나 관행, 관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네 번째는 관계상의 갈등이다. 이 갈등은 불신 등과 같은 상호관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다섯 번째는 가치갈등이다. 이는 가치관, 종교, 신념 등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말한다. 여섯 번째는 정체성에 따른 갈등이다.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강요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강영진, 2019).

갈등은 이해관계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형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다만 갈등을 분석하는 목적에 따라 갈등을 유형화해 볼 수 있다. 갈등은 그 대상이 되는 내용, 업무를 추진하는 단계, 갈등이 발생한 원인, 갈등이 발생한 공간적 범위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가 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갈등의 주체와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갈등의 주체에 따른 분류이다. 갈등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당사자의 특징이 불분명해지고 복합적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간 갈등이라는 것은

정부 상호 간에서 발생하는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또는 환경단체 등이 이해관계자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정부와 주민간 갈등에서도 갈등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갈등 사안에 따라 주민간 갈등, 주민과 환경 또는 시민단체간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둘째, 갈등의 성격에 따라 갈등은 이익갈등과 권한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익갈등은 이해관계자들이 사회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대립하는 것이고, 권한갈등은 이해관계자간 권한과 책임의 귀속여부나 적합성에 관련된 것으로 주로 정부와 주민간 갈등유형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갈등의 유형은 갈등이 발생하는 기원에 따라 목표적 갈등, 인지적 갈등, 감정적 갈등, 행동적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갈등의 수준에 따라서는 개인적 갈등, 집단적 갈등, 조직적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강예선, 2019). 강영진(2019)은 갈등이 실제 상황에서 나타내는 현상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갈등의 유형을 다섯가지로 정리하였다. 강영진은 갈등의 유형을 사실관계에 의한 갈등(data conflict), 이해관계에 의한 갈등(interest conflict), 구조적인 갈등(structural conflict), 관계에 따른 갈등(relationship conflict), 가치에 따른 갈등(value conflict)으로 구분하였다.

또 갈등은 발현의 방식에 따라 내적갈등과 외적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내적 갈등은 한 사람의 정신세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충돌 상황을 말하며 개인의 내면적인 상태 및 성격에 의해 나타나며, 그 유형으로는 욕구좌절, 목표, 역할, 의사 결정 등의 과정상의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적 갈등은 서로 다른 주체간의 갈등을 말한다. 외적 갈등은 개인 간, 집단 내, 집단 간 이해관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개인 간, 집단 간, 조직 간 갈등의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갈등은 심리학의 주요 연구주제이며 사회과학에서는 주로 외적갈등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갈등은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외적갈등을 말한다.

3) 갈등의 원인

갈등의 원인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인간의 욕구, 관심과 이에 대한 서로 간의 견해 차이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Moore(1996)는 갈등의 원인을 잠재적 원인, 협력의 기회, 분쟁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류하고 이

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개념적 지도(conceptual map)”를 제시하였다.

잠재적 요인은 진정한 갈등과 협력의 기회를 야기하는 갈등의 요인으로서 갈등의 쟁점, 욕구, 관심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택과 결과를 의미한다. 진정한 갈등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가시적, 객관적 차이의 결과이다. 이러한 갈등은 이해관계자들 간 불일치의 중심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결과가 제시되어야만 갈등이 해결된다. 이러한 갈등은 이해관계자들의 욕구, 이익의 차이와 갈등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선택과 결과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김주원·조근식, 2015).

그 외에도 외부에 존재하는 갈등의 8가지 요인은 갈등의 핵심 원인을 둘러싼 “파이 조각들(piece of pie)”을 구성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불필요한 갈등이란 이해관계자들 스스로가 갈등이 존재한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느끼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진정한 또는 객관적인 갈등의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종류의 갈등은 현재의 상황을 오해하거나, 잘못된 의사소통, 잘못된 정보나 자료, 고정관념과 같은 감정들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의 분류는 Moore(1996)에 의해 정의되었다. Moore는 갈등의 원인을 진정한 갈등과 불필요한 갈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을 면밀히 관찰하고 개별적인 갈등의 원인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갈등의 전개과정

지역갈등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만큼 갈등의 전개과정 또한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히 갈등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에 따라 갈등의 국면도 달라진다. 갈등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상호 대응방법과 수단에 따라 의견불일치의 정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간 의견불일치로 인해 특정 목적의 달성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태가 지속·강화되는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의견이 불일치하는 강도에 따라서 갈등과정을 이슈화 단계(issue), 분쟁의 가시화 단계(dispute), 난국 단계(impasse)의 3가지의 전개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주원·조근식, 2015)

첫째, 사회적 문제화인 이슈화 단계는 특정 사안에 대한 상이한 의견을 인지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단계로, 대부분 정책입안과 계획수립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단계에서 이해당사자는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의사소통하며, 의견조정은 주로 실무급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둘째, 분쟁의 가시화 단계는 이슈화 단계에서 발생한 의견 불일치와 갈등상태가 해소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심화되거나 협상이나 조정이 어려워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율적인 협상이 어려우며 제3자의 개입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화해(facilitation), 중재(mediation), 재정(arbitration) 등의 방법이 있다.

셋째, 난국 단계는 제3자에 의한 조정에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단계이다. 이 때는 이해당사자 간 자율적인 타협이 불가능하며,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이루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업무를 강행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진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준사법적 또는 사법적 판단은 재판절차(hearing courts)를 통해 제3자의 강제력 있는 결정에 분쟁 해결을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종후 외(1994)는 갈등집단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갈등의 전개과정을 보았는데, 개인의 이해갈등, 지역·집단이해갈등, 운동목표 형성 및 실현수단 사용의 순으로 갈등을 단계화하였다. 심문보(1997)는 갈등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는데, 기피시설의 입지갈등과정에 대하여 잠재적 갈등단계, 현재적 갈등단계, 갈등관리단계, 결과적 갈등단계로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분류하였다.

갈등은 정적인 과정이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으로 갈등은 일정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갈등의 과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으나 갈등은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는 동태적인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박명현, 2004).

Pondy(1967)는 갈등의 단계를 정의하였는데, 갈등은 먼저 발생한 사건의 여파, 잠재된 갈등, 인지된 갈등, 느껴진 갈등, 표출된 갈등, 갈등의 여파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갈등이라는 것은 일회성의 성격을 보이거나 독립적인 성격의 것이 아닌 연속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보았다.

갈등의 단계에 대하여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체적으로 관점에 따라 5단계나 6단계로 분류하여 갈등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조중

현, 2007). Forsyth(1983)는 집단 내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갈등의 단계를 의견불일치, 대결, 격화, 진정, 해소의 5단계로 분류하였다. Walton(1987)은 개인 간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갈등의 단계를 갈등 이슈, 갈등유발, 갈등행위, 갈등의 결과로 4단계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Robbins(1983)는 갈등의 진행과정을 잠재된 갈등, 갈등의 지각, 갈등태도의 형성, 갈등의 표출, 결과와 평가로 5단계로 분류하여 갈등을 설명하였다.

홍성만·박홍엽(2006)은 갈등주기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는데, 갈등의 발생과 증폭요인을 다루었다. 홍성만·박홍엽은 갈등주기를 갈등 잠복기, 갈등 표면화기, 갈등 확대기, 갈등 완화기, 갈등 해소기, 갈등소멸이라는 6단계로 나누었다. 그들은 갈등 해소기 단계에서 구체화된 합의라는 성과물이 이행의 과제로 남게 되면서 새로운 갈등의 잠복기로 순환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5) 갈등조정방법

갈등관리란 갈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악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막고 갈등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나 조건을 마련하여 갈등의 예방과 해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안광일, 1994). Robey(1982)는 갈등관리에 대하여 갈등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갈등의 수준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Krauss(1984)는 갈등관리 자체가 갈등해소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갈등관리는 갈등해결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것으로, 서로 합의되지 않고 있는 이슈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다루어지면서 갈등이 수용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악화시키지 않거나, 갈등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안성민(1998)은 갈등관리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거나 상호관계의 조정을 통하여 갈등이 가져오는 편익이 크다면 적절하게 갈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편익을 확보하는 전략이고 정의하였으며, 유혜운 외(1997)은 갈등관리에 대하여 역기능적이고 파괴적인 갈등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키고, 갈등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촉진시키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하혜영(2007)은 갈등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이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갈등의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와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갈등관리라고 정의하였다.

Rahim(2002)은 갈등관리를 통하여 갈등을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것은 아니고, 갈등을 관리대상으로 바라보아야 갈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갈등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만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까지 보며 적극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완화시키거나 갈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갈등관리란, 발생 또는 예측 가능한 갈등상황에 대한 전략적, 수단적 접근방법으로서 그 목적은 갈등의 역기능을 막고 갈등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갈등관리는 갈등관리를 위하여 어떤 접근방법이 활용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갈등관리에서는 전통적인 사법적 갈등 관리방식, 대안적 갈등 관리방식(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과 분쟁적 갈등관리 방식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소 비민주적인 분쟁적 갈등관리 방식을 제외하면 공공갈등관리는 소송 등의 사법적 판단에 의한 전통적 갈등관리 방법과 소송 외의 분쟁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실무, 기법인 대안적 갈등관리기법(ADR)으로 나눌 수 있다(Mnookin, 1998).

전통적인 사법적 갈등 관리방식은 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은 소송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소송의 과정을 거칠 경우, 기본적인 전 과정이 모두에게 공개된다는 장점이 있다. 소송을 통한 갈등해결은 법의 적용에 의해 해결 가능한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둘러싼 갈등에 한정된다. 소송의 경우 판단 대상이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로 한정되므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한 갈등의 해결은 확정 판결에 의해 해결이 되며, 그 판결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대안적 공공갈등 관리방식(ADR)은 전문 지식을 갖춘 중재인들을 활용하여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는 비공개되나 소송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ADR에서 갈등의 해결은 법의 적용에 의한 논리가 아니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의 유무에 대해 유연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ADR에서는 판단의 대상자가 아닐지라도 폭넓게 갈등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종합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ADR에서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중시한다.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갈등해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심준섭 외, 2013)

갈등관리를 위한 접근방법을 구분하면 전통적 갈등관리 접근(사법적 판결방식)방식과 대안적 갈등관리 접근(ADR)방식으로 크게 구분이 가능하다(Carpenter & Kennedy, 2001).

전통적 갈등관리 접근방식이란 우월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갈등당사자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나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Ross, 1993). 전통적 갈등관리 방식 중 독자적 갈등 관리방식이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갈등당사자들이 개인적 성향과 당면한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활용하는 개별적 방식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독자적 갈등 관리방식으로는 지연, 회피, 무마, 일방적 정보제공, 일방적 권력행사 등이 있다(강예선, 2019).

지연(postpone)이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와 기한을 미루는 방식을 의미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갈등의 수준으로 인하여, 갈등의 강도가 높을 때에는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고 갈등이 소강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갈등 해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갈등사안의 중요도가 낮은 편에 속하거나 급하게 갈등을 해결해야 할 때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것으로 갈등의 궁극적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방식이다(전주상, 2007).

회피(avoidance)는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철회(withdrawal)가 있다. 회피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갈등상황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회피함으로써 상대방이 자기 자신마저 무시해버릴 수 있는 방식이다(박호숙, 2000).

무마(smoothing)란 상대방의 감정만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유인책을 제시하여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갈등을 희석시켜 표면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무마는 정보를 기초로 한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어 회피보다는 바람직하지만, 갈등의 원인을 만족할 만큼 밝히기는 어렵고 나중에 갈등의 원인이 드러나면

갈등을 더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방식이다(전주상, 2007).

일방적 정보제공(informing)이란, 상대방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주입 시키는 방식이다. 상대방에게 언젠가는 정보가 노출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있고, 그 문제가 복잡해지기 전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용하게 만들어 빠르게 갈등 해소를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일방적 정보제공은 설명회, 게시판, 공고문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상대방의 의견 수렴은 무시하고, 일방이 갈등상황을 사전에 종결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유해운 외, 1997).

일방적 권력행사(unilateral power play)는 상대방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자신의 결정만 일방적으로 공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방적 권력행사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갈등해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다(Gupta, Singh, & Sprague, 1993).

전통적 갈등관리 방식 중 사법적 갈등관리 방식은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한 갈등관리를 의미하며, 사법기관의 강제성을 띤 결정에 의한 갈등관리 전략이다(강예선, 2019). 재판을 통한 사법적 갈등관리방식은 가장 중립적인 해결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해결 기준이 명확하다는 인식이 강하여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갈등관리방식이다. 그러나 사법적 판결에 의한 갈등관리는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판사에 의해서만 판단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갈등의 당사자들 간의 합의도출은 없고, 법의 원리만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법적 판결에 의한 갈등관리의 특징은 가장 구속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갈등이 해소되었다기 보다는 재판 결과에 의해 이해관계자 간 승패가 갈리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결국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사법적 판단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소송절차 따른 과도한 형식성과 복잡성의 문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엔 갈등이 해소되지 않다 그 상황이 지속되거나 또 다른 갈등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박효준, 2023).

이러한 사법적 방식의 사각지대 또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등장한 것이 최근 서구권 선진국 등에서 확대되는 추세인 방식이 대안적 갈등관리 방식이다(하혜영, 2011).

대안적 갈등관리(ADR)방식이란 광의의 개념으로 갈등해소를 위해 법원의 소송 이외의 대안이 되는 모든 갈등해소방법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해 협상을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법원의 소송(법률적 절차) 이외의 갈등해소방식을 통칭한다(김영욱, 2015; 강예선, 2019). 여기에서 대안적(alternative)이란 개념은 공공적(public)이란 의미보다는 사적(private)인 의미이고, 강제적(compulsory)인 의미보다는 자율적(voluntary)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안적 갈등관리 방식을 비공식적 분쟁해결수단(informal method of resolving dispute)으로 부르기도 한다.

대안적 관리방식의 장점은 첫째, 문제해결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결정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함으로써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여, 갈등 이후에도 관계 형성이 지속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대안적 관리방식은 이해 당사자 스스로가 결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지속성이 높다. 심각한 갈등 상황에서 대리인에게 모든 결정권을 위임하였다면, 이해 당사자는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갈등이 해소되는 전 과정에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고, 스스로 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대안적 관리방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라도 이해 당사자들의 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대안적 갈등관리 방식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최성섭, 2016).

5) 갈등영향요인에 관한 이론

(1) 집단갈등이론

집단 간의 기능적 관계에 근거한 이론으로, 집단들이 돈·정치적 권력·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자원의 실제 혹은 지각된 희소성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경우, 제한된 자원으로 인하여 한 집단만이 승자가 되어 원하는 자원을 얻고 다른 집단은 자원을 얻지 못하는 제로섬(zero-sum) 상황에서는 집단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1961년, 웨리프와 그 동료들은 오클라호마의 도둑 동굴(Robbers Cave)이라는 주립 공원에 인접한 청소년 캠프 내에서 발생한 집단 간 갈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웨리프는 집단이 경쟁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한 집단의 성공은

다른 집단을 실패에 이르게 한다는 집단 간의 제로섬(zero sum)과 같은 경쟁 관계는 다른 집단 구성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와 고정관념을 확산시킨다고 주장하였다(Dovidio et al., 2010).

Campbell(1965)이 제안한 현실적 집단갈등 이론(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에서도, 집단 간 갈등의 원천을 양립 불가능한 목표와 제한적인 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본다(Campbell, 1965). 이 이론은, 집단 간 협오가 어떻게 목표 갈등과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을 일으키는지를 설명하고, 집단 간 협오를 수반하는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감정을 설명해 주며(Jackson, 1993). 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집단 간 경쟁을 인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원에 대한 다른 집단의 접근을 제한하는 시도를 양산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이론이다(Myers, 2005). Myers는 언급하는 현실적 갈등은 어디까지나 인지된 갈등이고, 집단 간의 현실적 목표에 대한 경쟁관계에서 발생되며,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경쟁에 바탕을 둔 인지된 현실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Stephan & Stephan, 1996; Hogg, 2013)

집단갈등 이론은 두 집단이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이 협력해야 한다면, 두 집단은 서로 조화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추병완, 2011). 즉, 집단 간 관계에서 목표에서 대해 상호 의존성을 보이고, 그 목표가 비(非)제로섬 게임(non-zero sum game)적인 성격을 보인다면 집단 간 갈등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Hogg, 2003).

(2) 사회적 정체성 이론

사회적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은, 일상에서 발현하는 적대(hostility), 비관용(intolerance), 그리고 편견 등을 집단적인 인식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론으로서, 국가·인종·나이·성별 등 집단 간 사소한 차이에 의한 범주화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론이다(김금미·안상수, 2008).

Tajfel(1974)이 처음 주장하고 Tajfel & Turner(1979)에 의하여 발전된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서는, 세대 간 갈등은 인지적 노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생긴 사회적 유목화와 긍정적 사회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동기에서 생긴 ‘내집단 선호(ingroup favoritism)’에 의해 비롯된 산물로 해석되는데, Tajfel(1978)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 이상의 내집단(ingroups)으로 분류시키고, 그 집단 구성원의 자격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다른 집단과의 경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특히 자신이 속한 내집단의 특성은 더욱 상세하게 묘사하는 반면, 자신이 속하지 않은 외집단(outgroup)의 속성은 가능한 단순하고 동질적으로(outgroup homogeneity)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원영희·한정란, 2019).

사회적 정체성은, 개인적 수준을 초월한 자기 영역의 확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을 말하는 개인의 정체성을 넘어 사회적 단위까지 고려할 수 있는 탈개인화의 자기범주화가 바로 사회적 정체성이다. 다른 사람들과 유사해지려는 인간 본연의 기본적 욕구가 이러한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Brewer, 1991).

사회적 정체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세대에 따른 범주화는 본인이 속한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집단과의 사회적 비교를 하게 되며, 이를 통해 내집단 구성원 간에는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차이가 드러난 외집단과는 갈등이 촉발되게 된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은 갈등 형성을 근원을 집단 범주화에 두고 있으므로, 재범주화, 탈범주화, 교차 범주화와 같은 범주화에 대한 조정 및 개입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갈등 감소에 효과적임을 잘 보여준다. 즉, 사회적 정체성 이론은 특히 외집단을 경멸하거나 비하하지 않는 것에 건강한 내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 발달 및 갈등 감소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추병완, 2011).

(3) 집단 간 접촉이론

집단 간 접촉이론은 집단 간 편견과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연구해 온 대표적인 이론적 틀 중 하나이다. 접촉을 통하여 다른 집단에 대한 지식을 고양시키고, 다른 집단과의 접촉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킨다. 또한 공감 능력을 제고하여 편견과 갈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Allport, 1954). 이 이론을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에 적용하면, 단절과 배제는 갈등을 강화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고, 반면에 빈번한 접촉은 갈등을 해소하고 태도를 개선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원영희·한정

란, 2019).

집단 간 접촉 이론을 처음 제기한 Allport는 단순히 집단 간 접촉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여 집단 간 관계를 개선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집단 간 접촉을 통한 긍정적 효과는 접촉 상황 안에서의 동등한 집단 지위, 공동 목표, 집단 간 협동, 권위·법 또는 관습의 지원이라는 네 가지 핵심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였다(Allport, 1954). 즉, 모든 접촉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긍정적인 조건에서의 접촉은 집단 간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지만, 부정적인 접촉 경험은 오히려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Amir, 1976). 접촉의 양보다도 접촉의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접촉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태도 변화의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다(한정란, 2000).

집단 간 접촉이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이유를 정리하자면(원영희·한정란, 2019), ① 집단 간 접촉이 외집단에 대한 학습을 촉진하고(Allport, 1954), ② 집단 간 접촉이 부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던 외집단에 속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줄여주며(Stephan & Stephan, 1985), ③ 집단 간 접촉이 외집단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공감하게 하고(Stephan & Finlay, 1999), ④ 편견은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정보들에 근거하여 그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일반화하거나 과잉 단순화한 결과이기 때문에 집단 간 접촉을 통한 편견의 감소는 집단 유목의 재개념화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Allport, 1954).

집단 간 접촉이론은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좋은 접촉(good contacts)이라는 상황적 조건도 제시해주고 있다. Dixon, Durrheim, & Tredoux(2005)는 좋은 접촉을 위한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접촉은 정기적이고 빈번해야 한다. 내집단과 외집단은 구성원의 비율을 균형있게 유지해야 하고, 참된 만남의 잠재력을 가져야 하고, 여러 사회적 무대 및 상황에서 일어나야 한다. 경쟁이 없어야 하고, 관련된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어야만 하고, 지위의 평등을 공유한 개인들 간에서 일어나야 하고, 고정관념의 대상이 된 타 집단 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상위 목적의 실현을 위한 협동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규범적·제도적 지원을 받아야 하고, 불안감 혹은 여타의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어야 하고, 개별화된 것이어야 하고, 참된 우정 형성을 포함해야 하고, 타 집단의 전형적인 혹은 대표적인 인물들과 이루어지는 것이

어야 한다(추병완, 2011).

(4) 통합적 갈등 이론

통합적 갈등 이론에서는 현실적 갈등, 상징적 갈등, 집단 간 불안 심리, 부정적 고정관념의 네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오영삼 외, 2014).

첫 번째, Campbell(1965)의 현실적 집단갈등 이론에 근거한 현실적 갈등은 집단 간의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권력 또는 자원을 획득하고자 할 때의 경쟁관계에서 유발하는 상황을 말하며(김영곤, 2016), 집단 간 갈등의 원인을 양립할 수 없는 목표와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본다(Campbell, 1965). 각 집단은 권력, 사회적 지위, 돈과 같은 지각된 희소성 또는 자원의 실재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의 결과로 한 집단만이 승자가 되어 자원을 얻고 다른 집단은 자원을 얻을 수 없는 제로섬(zero-sum) 상황이 되어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원영희, 한정란, 2019). 현실적 집단갈등 이론에서는 집단 간 적대감 또는 혐오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목표 갈등 및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을 촉발되는지를 설명하고, 나와는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 차별의 감정 또한 알 수 있다(Jackson, 1993).

두 번째, 상징적 갈등은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 사회적 규범 등의 차이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이다. 어느 한 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규범 또는 질서가 외집단의 상징에 의해 훼손되었을 때 일어난다. 규범적인 부분을 강하게 고수하는 집단일수록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높은 수준에서 느끼게 되어 통합의 수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Vala & Ramos., 2006).

세 번째, 집단 간의 불안 심리는 어느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과 접촉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촉발 하는 갈등을 말한다. 집단의 자아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를 경험하거나 다른 집단 구성원과의 관계에서의 거부감 내지 불쾌감 등의 반응 현상이라 볼 수 있다(Stephan & Finlay, 1999). 다른 집단과의 접촉으로 인해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게 직·간접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높아질 것이다(김영곤, 2016).

네 번째, 부정적 고정관념은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향한 부정적 편견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나와는 다른 집단에 대하여 부정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 간의 불안이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관점들과는 구분된다(Hogg, 2013).

이처럼 통합적 갈등이론은 현재 지역공동체 내에 있는 희소성을 쪼개 자원을 두고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점, 선주민과 정착주민이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선주민과 정착주민이 형성하고 있는 가치관 또는 신념의 차이 등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고 있다.

(5) 상대적 박탈 이론

상대적 박탈 이론은 개인 또는 집단이 깨달은 불공정성과 비형평성에 대한 맥락적인 상황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 이론은 1970년대에 정교성을 갖추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한덕웅, 2002), 여러 학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시한 Stouffer et al.(1949)은 만족 또는 불만족을 느끼는 기준이 객관적 보다는 주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Davis(1959)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정의를 ‘집단의 구성원 중 박탈을 경험한 사람이 박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감정 또는 상태’라 하였다. 이 때의 박탈감은 불만, 불평, 분노, 실망 등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봄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Townsend(1979)는 상대적 박탈감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 객관적 박탈이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건으로 의식주의 결핍 상황에서의 박탈감을 말한다. 두 번째, 관습 또는 규범적 박탈이다. 이는 집단 또는 사회에서 특정한 가치나 생활양식이 형성됨에 따라 사회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이하가 됐을 때 나타나는 박탈감을 말한다. 세 번째, 개인의 주관 혹은 집단적 박탈이다. 이는 개인 또는 집단에서 비교된 관점에서 상대적인 결핍상태가 나타났을 때의 박탈감을 말한다. Runciman(1966)은 상대적 박탈감을 이기적 박탈과 우애적 박탈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이기적 박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 간 비교로 일어나는 감정이고, 우애적

박탈은 집단적 수준에서 대표 집단과 비교했을 때, 다른 집단에 비해 본인이 소속된 집단이 전체적으로 박탈됐다고 인지할 때 경험하는 감정이다. 집단적 차원의 우애적 박탈은 사회적 정체성의 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사회정체성이 개인 차원의 정체성이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이다(Brewer, 1991). 따라서 집단차원에서 지각하는 박탈감은 개인적 수준에서 느끼는 박탈감에 비해 상호간에 차별을 보다 강하게 인지될 수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불이익을 경험한 집단의 경우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느낀 감정에 비해 크게 차별을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개인 또는 집단이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만을 촉발시켜 갈등으로 심화되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 박탈을 경험할 경우에는 자신에게 처한 박탈이 이유나 조건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의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하면서 조정의식을 가지게 된다(김영곤, 2016). 상대적 박탈 이론에 근거했을 때, 집단 간 관계를 세대 간 갈등문제에 적용할 수 있겠다. 정착주민에 대한 혜택 정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선주민이 특정한 상황 또는 요인에 의해서 박탈감을 지각할 경우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대립구도가 성립하게 되고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2.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

1) 지역공동체의 개념

공동체는 영어로 community라고 하는데, 이는 공동소유를 의미하는 common과 통합을 의미하는 unity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서, 오늘날에는 단순히 공동체라는 단어만을 사용하지 않고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표현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원들 간 공동의 사회적·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서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Community)는 라틴어로 communitas

(같음)에서 기원한 것으로, communis(모두에게 공유되는)로부터 나온 의미이다. communitas라는 말은 라틴어 접두사 con-(함께)와 munis(서로 봉사하다)의 합성어이다(강예선, 2019).

공동체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학자와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공동체(Community)는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김도상, 2016). 국내에서는 공동체란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을 이루고, 목표를 공유하면서 공존할 때의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상섭, 2001).

비슷한 개념으로서 ‘근린’이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된다. 근린(Neighborhood)이란 도시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간적 범위와 자연 발생적 경계선이 형성되는데 이를 통해 구분된 지역을 의미한다(김도상, 2016). Chaskin(1997)은 근린이라는 것을 주민의 거주 및 사회적 교류를 전제로 하는 공간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단위영역으로 정의하고, 근린이라는 개념을 도시의 구성에 가장 기본이 되고 사회적인 기능적인 단위로써 설명하고 있다.

철학적으로 공동체는 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존엄과 창의 그리고 자유와 선택을 가장 중시하는 사상이다. 반면에 공동체주의는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위해 개인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자발적 기여가 있어야 됨을 강조하는 개념이다.(박세일 외, 2008). 공동체는 집단주의와도 구별된다.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로운 참여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집단을 뜻한다. 공동체는 구성원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희생해야 되거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연합하는 집단주의와는 구별된다(박은복, 2019).

구성원의 인식적인 측면에서 공동체의식을 별도로 정의하기도 한다. 양덕순·강영순(2008)은 공동체 의식이란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속감을 뜻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구성원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노력을 통하여 충족되는 공유된 믿음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보았다. 김성수·김경준(1998)은 공동체의식이란 지역사회에 소속됨으로서 받게 되는 충만한 느낌이라고 정의하며, 지역주민과의 일종의 연대의식, 지역사회와의 일체감은 지역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및 구성원들과 친밀한 느낌을 가지는 것도 공동체 의식이라고 정의하였다. 강예선(2019)은 공동체 의식이란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공동체 내에서 소속감을 갖고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겨 협력을 통해 함께 해결하려는 의식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였다.

Sarason(1974)은 공동체 의식이란 다른 사람들과의 유사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 기대하고 있던 것을 제공하거나 행동하여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의지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구조의 한 부분이 되는 감정이라 정사고 있다(전대욱 외, 2012). Polpin(1972)은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얻어지는 문화적인 정체성과 심리적인 안정감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정의하였다.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를 거치면서 나타난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안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 중심의 파편화된 생활방식이 소외, 고독, 자원 낭비, 지역의 소멸과 같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동체 활성화 및 현동과 공유 등의 공동체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박효준, 2023)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지원사업은 비단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아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사업은 섬이나 농촌 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획, 확장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새로운 공동체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독립적 형태의 공동체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동체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정원식, 2020).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는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 확대, 공유자원의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의 구체적으로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재열(2006)은 지역공동체 내에서 신분 질서, 가족 내 질서, 관습 등이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으며 토지를 가장 중요한 물질적 요소로 여기며 전인격적인 관계가 뿌리내린 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정의하였으며, 박종관(2012)은 사회적 유사성, 공통된 전통과 습관 등을 의미하는 지역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집단을 지역공동체라고 정의하였다. Maclver(1917)는 지역공동체를 공동생활의 영역, 지리적 영역 또는

특별한 공간에 모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공동체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구성원 간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공동체에 대한 개념에 있어 지리적 영역을 강조하기도 한다. 공동체의 조건으로서 지역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공동체란 사회적 응집력으로 특정 지어질 수 있으며, 지역 내에서 함께 생활하고, 소속되어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김도상, 2016).

한편, 공동체(Community)를 마을이나 소도시와 같이 국가의 일정한 지역적 경계 안에서 공동의 생활을 하는 생활지역으로 사회적 응집력을 갖고 있는 공동의 생활 영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지리적 범주를 중심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Maclver(1917)).

최근 정부정책 등의 대상이 되는 개념으로서 지역공동체가 자주 등장한다. 지역공동체는 물리적 공간이라는 특성과 생활상의 밀접한 상호작용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생활 전반에 관해 서로 긴밀하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의 가치와 목표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단위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나 정서적인 동류의식 보다는 지리적인 근접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박병춘, 2012).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는 동일한 지리적 공간을 배경으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민찬·남재걸, 2021). Mattessich & Monsey(2004)는 지리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며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서로 연결된 사람들을 지역공동체라고 정의하였다.

박은복(2019)은 지역공동체가 어떤 가치와 조건으로 유지되고 있는가를 고찰한 연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 연계활동 잘 갖추어진 기반과 좋은 관계망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학자별로 지역공동체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재열(2006)은 정주단위를 기초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기태·하현상(2016)은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심

리적 유대와 사회적 관계를 공유하면서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생산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영정(2007)은 정주단위를 지역공동체의 기본으로 설정하여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집단이라고 정의하였고, 김선기(2010)는 공간, 상호작용, 정체성이라는 3가지 요소가 결합된 의미가 지역공동체라고 하며, 특정한 지리적 공간(Communities of place)에 거주하며 공동의 이해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정서적으로 소속감을 가지는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지역공동체는 지리적 근접성을 기초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며 상호작용하는 구성원들의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지역공동체의 특징

마을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사한 말로는 고장이 있다. 고장은 사람이 많이 사는 지방이나 지역을 뜻하며, 촌락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을 뜻한다. 촌이라는 개념은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도시보다 인구수가 적고 개발이 덜 되어 있어 자연을 접하기가 쉬운 곳을 의미하고 있으며, 동네란 사람들이 생활하는 집이 모여 있는 곳을 뜻한다. 취락은 건설적인 개념을 적용하여 인간의 생활 근거지인 가옥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취락은 광의의 개념으로 가옥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거주 형태 전반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마을은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마을은 농어촌 지역의 오래된 촌락이라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동체적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을 포괄한다고 본다. 농어촌의 주거지역은 인문사회적 생활환경의 특징으로 인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본다면, 도시지역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마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김일순 외, 2021)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도 마을을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마을이란 일상 생활환경을 뜻하는 것으로서 협의적으로는 동네

에 있는 거주지, 거리 등을 의미하며 광의적으로는 동, 구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의 개념들을 종합하여 보면, 마을이라는 것은 물리적 범위를 초월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에서 주민 스스로가 인식하는 생활환경과 주민들 간의 관계를 통하여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마을은 농어촌의 인문·사회·문화적 생활환경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도시와 농어촌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는 정주환경이 있고, 정주환경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심익섭·심화섭, 2016).

이 외에도 마을을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으로 설명하며, 삶의 터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이재민·권기창, 2017), 마을을 주민들의 일상적인 배움터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이웃과 마을을 두루 돌아보게 하여 공동체 회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따라서 마을이라는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지역적 경계에 한정하여 개념을 정의하기 보다는 지역 내의 공동체와 구성원 사이의 가치공유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마을이란 주민들의 생활이 영위되는 일정 영역의 공간·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김일순 외, 2021).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전통적으로는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 집합적 실천과정 등을 들고 있다. Hillery(1955)는 공동체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요소를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라고 하였다. 공동체는 지리적 근접성을 기초로 하여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공통의 목적을 갖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김선기·이소영, 2007). 공동체는 지역성(Locality)을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지역성은 주민들의 거주공간이자 일상생활을 영유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지리적 영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역주민 사이의 공동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관계망으로서 지역 단위를 기초로 하는 사회와 주민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며 서로 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 실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중심의 집합적 실천과정이다(김도상, 2016). 이명호(2016)는 공동체 구성요소를 내적형식과 외적형식으로 구분하여 공동체의 구성요소로서 내적형식으로 지리적 공간, 규범과 가치와 생활의 공유, 평등한 관계 및 자유향유, 공동체입

단 절차를, 외적형식으로 그물망형 결합구조, 민주적 의사결정, 재화의 공유, 자치와 규범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공동체의 구성요소에 관한 논의는 대체적으로 Hillery(1955)가 제시한 공동체 구성요인, 즉 지리적 영역(geographic area),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공동 연대(common tie)의 세 차원으로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에는 공익성을 제 4의 구성요소로 포함하기도 한다. 다만, 최근의 논의에서는 공동체의 개념에서 지리적 영역은 차츰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리적 한계에 대한 극복이 쉽고, 통신망을 활용한 공동체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지역공동체의 구성요소로는 지역성,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을 꼽고 있으나, 최근 정보통신 및 교통의 발전으로 인하여 지리적·물리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지역성이 갖는 의미가 다소 약화되었다고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최근들어 지역공동체에서는 다양한 의사소통 매체를 통한 간접적 상호작용, 개방적 공동의 유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Saeki(2002)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인 지역공동체에 대하여 지역공동체는 공동체간 연대가 강하게 나타나며, 암묵적, 동질적 정보를 깊이 공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개혁이나 변화에 대응이 늦은 ‘폐쇄적 지역공동체’는 공동체간 연대가 약해 이질적이거나 새로운 정보의 유통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개혁과 변화에 적극적인 ‘개방적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Saeki는 이 두 공동체 중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고 평가하지는 않았으며, 이들의 의식이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새로운 지역공동체가 탄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제주의 공동체에 적용하여 보면, 제주 지역공동체가 처해있는 다양한 갈등 속에서 갈등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에 공헌하고자 하는 새로운 인적 자원의 수용과 오랜 시간 형성되고 공유되어온 지역성에 대한 존중, 이 양립된 요구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 마련이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정은재, 2022)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필요성은 아래의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파괴된 공동체 의식 회복, 둘째,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의해 사회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 셋째, 저성장 시대(low-growth era)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해결, 넷째, 인구의 과소화 문제해결이다.

최근에 공동체는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공동체가 갖는 철학적 가치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박효준, 2023).

반면에 공동체 및 공동체성에 대해 맹목적인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김진형(2019)은 현대사회에서 공동체가 무조건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무비판적 공동체 담론은 도시사회의 공동체가 붕괴되었다고 간주해 버리는 문제, 공동체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배제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지에 대한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이를 위해 공동체의 중첩성 인식과 그에 따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결합된 진보된 공동체로서의 지향점 설정을 제안하였다.

천선영(2013)은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비근접적, 비대면적, 이질적 공동체성의 형성이 가능하며 또한 요청되는 형태라고 제시하고 이러한 공동체를 전통적 공동체성에 비해 가치적으로 ‘중성화된’ 공동체성이라고 정의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지리적 근접성을 기초로 대면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조직의 형태 뿐 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여야 한다. 기존의 공동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공동체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공동체, 공동체성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필요하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 자체의 가치 또는 목표를 따로 구분하거나 그 효용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한다.

공동체 활성화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자 목적이 될 수 있다.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구성원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갈등, 사외 등의 문제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즉,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공동체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방안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같은 장애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3) 선주민과 정착주민에 대한 이해

이주나 정착과 관련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이주민’ 또는 ‘정착(주)민’이 있다. 이주(移住)는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산다는 의미로 ‘움직임’을 중심으로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정착(定着)이라는 것은 사람이 한 곳에 자리를 정해서 머물러 산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움직임’이 멈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주라는 것은 정착의 과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의 단어로 결합하여 이주정착민 또는 정착이주민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즉, 정착이라는 것은 이주라는 과정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21).

그러나 탈근대사회의 진입과 신자유주의 이후 물류와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이주와 정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주와 정착이 하나의 연장선에서 이해되던 고전적인 이해가 감소하게 되었고, 이주와 정착이 나누어 보거나, ‘이주-정착-이주-정착’이라는 사이클을 반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게 되면서 이주와 정착을 가리키거나 현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개념들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의 정착주민을 위한 지원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4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2017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며, 정착주민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에서는 정착주민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조례에는 예비정착주민이란 개념도 존재하는데, “제주자치도 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제주자치도로 이주하여 살기를 희망하여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예비정착주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정착주민은 특정기간동안 제주 지역으로 정착한 사람(internal migrants to Jeju)으로 규정하기도 한다(김미량·김민영, 2017).

이주라는 것은 익숙했던 주거지를 떠나 새로운 터전을 찾는 것으로 기존에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는 점이나, 새로운 곳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로 인하여 이주에는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착지에서의 삶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문화적 융화, 심리적 장벽, 인적 교류 등 저해 요인은 지난 오랜 시간동안 많은 학자들의 연구주제가 되어왔다(한지은 외, 2022).

정착주민에 대한 연구는 이방인(stranger)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김석호 외, 2013). 짐멜은 이방인에 대하여 완전히 외부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에 소속되려고 시도하는 않고, 이질적 요소를 공동체에 가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낯설음으로 인해 내부의 적으로 몰리기도 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특히 중세시대 유럽의 유대인을 대표적인 예로 들며, 그 시대의 상인은 폐쇄적인 농경사회에서 유일하게 이동력을 띠고 있으며, 인두세도 내야 하는 존재로서의 특징이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이방인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하였다.

이방인에 대한 짐멜의 이러한 정의는 제주에 정착하기 위하여 이주한 정착주민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제주에 계속 머무르고 있지만 온전히 제주에 속하지는 못하고 무언가를 낯설다는 성격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김동현(2017)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정착주민을 제주지역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정착주민을 제주문화의 고유성과 타 문화 간의 이질성을 가진 존재로 여기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착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그들이 정착한 곳의 문화와 달라 정착주민들이 이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그러나, 정착주민은 국내 자국민의 이주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응의 문제가 제주지역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정착주민에게는 낯선 제주 고유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착주민 실태조사를 통한 공통적인 그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 사람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일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제주 거주기간이 충분히 긴 상황에서도 ‘육지 것’이라 불리는 지속적인 구별 짓기로 인하여 지역공동체에 편입하고 싶었으나 진입장벽이 존재함을 느꼈고, 이로 인해 정착주민은 선주민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화진, 2016). 또한, 2020년 사회지표조사에서는 ‘제주 생활에 적응했다’라고 응답한 정착주민이 응답자의 51% 정도로 나타나

2019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정착주민으로부터 구별 짓기의 주체로 지목된 선주민이 실제로 정착주민에게 배타적 인식과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주민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제주로의 이주 특성, 선주민의 특성, 제주의 지역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한지은 외, 2022).

첫째, 제주 정착주민들의 이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으로 이주한 동기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2000년 이후 귀농과 귀촌 인구 중에서 실제로 농업을 생업으로 할 것을 계획하고 이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였으며, 오히려 탈도시를 하여 자연 속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이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이유 말고, 그 외적인 다양한 이유로 제주에 이주한 사람들에 대하여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융합시켜 ‘자발적 유배자’ 또는 ‘적극적 망명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에는 기존의 산업사회에서는 이주 관점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신유형의 이주가 늘어났다.

선주민 관련한 선행연구도 존재하고 있었다. 선주민은 정착주민을 마을 사무소에서 하는 방송이 시끄럽다고 민원 제기하는 사람, 지역주민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 지역 내 교감 없이 장사만 한다고 느껴진다는 등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한다(이화진, 2016). 탈도시를 꿈꾸거나 자연 속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목적으로 제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제주는 힐링의 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착 오랜 기간 제주를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선주민에게 제주는 힐링의 장소가 아니었다. 선주민들에게 제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나가야 하는 주거지이자 생계의 터였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선주민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규범과 질서가 구성된 지켜왔으며, 제주는 그런 생활공간이다. 제주의 여성 고령자는 힘이 닿는 한 본인의 가족 생계를 책임지려는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오랜 시간을 살아왔으나, 그들의 눈에 놓고먹는 전업주부는 ‘육지 것들’이라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인다는 인터뷰가 있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김주호 외, 2020).

또한, 제주의 경제구조와 질서에의 참여를 거부하는 정착주민은 선주민들에게 더욱 더 이질적인 존재로 느껴질 것이다. 또한, 선주민들과는 다른 정착주민들의 가치

관, 생활양식 등으로 인하여 정착주민의 문화가 제주의 지역사회에도 유입되고, 그 결과 선주민과 정착주민은 지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생활영역에 있어서는 분리되어 있는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현상은 단순히 공간의 분리에 그치지 않고 다시 사회경제적 갈등, 문화적 갈등 등으로 확대되어 사회 전반에 갈등을 야기한다(염미경 2019). World Economic Forum(2017)에서는 이와 같은 클러스터가 사회통합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갈등은, 에리히 프롬이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자신이 지향하는 대상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아주 근원적인 반응적 증오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둘째, 정착주민의 특성과 함께 정착주민과 많은 관계가 있는 선주민의 특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다. 특히 본 연구는 선주민이 가진 특성도 함께 고려하여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로의 이주는 탈도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착주민은 제주의 전 지역에 고르게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때 지역사회에서 정착주민을 가장 밀접하게 만나게 되는 선주민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고령층일 가능성이 높다. 제주는 도시와는 다른 주거 환경을 갖고 있으며, 공동체에서의 연결망은 도시에서 이주한 정착주민들에게는 매우 이질적이게 느껴지고 낯선 구조라고 생각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선주민들의 눈에도 정착주민이 이질적으로 보일 것이다. 같은 생애주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끼리 비슷한 연령층 범위 내에서 주로 활동하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연령이라는 특징 외에도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가 개인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다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직업 등의 지위, 전문직이거나 중간관리자 이상일수록, 고용상태가 안정적인수록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서 언급된 변수들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개인은 삶이 안정적인 것이라는 전제조건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른 지역인 완주군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층이 유입되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된 대표적인 지역이다. 완주군에 유입된 귀촌인 청년층은 문화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선주민과 긍정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며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완주군 고산면에서는

문화귀촌인인 청년들의 활동이 커뮤니티공간을 중심으로 성장해 갔으며 이 청년들은 지역 내에서 새로운 지역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공동체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은 완주군의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20년 실시된 완주군의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는 정착주민들이 전반적인 생활은 만족하지만 선주민의 선입견과 텃세로 인한 갈등이 있다고 대답한 비중이 50%가 넘었다. 그만큼 생활 방식과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정착주민의 주요 활동방법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공동활동이므로 선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유상춘, 2022).

농촌지역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시작된 것은 농업인구가 감소하여 농촌지역의 노동인력이 부족해지고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면서부터 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농촌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력한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농촌에 유입되는 인구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귀농귀촌 정책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 중 농촌활성화 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연구 또한 201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귀농귀촌을 하는 것이 경제적인 동기보다는 비경제적 동기에 의한 경우, 정착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활동은 선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타 지역에서도 공동체 활동을 목적으로 새로운 문화귀촌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유상춘, 2022)..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

제주에서의 정착주민은 이방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제주에 정착하기 위하여 이주한 사람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머무르고 있지만, 제주에 온전히 적응하고 속하지는 못하고 낯선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에는, 2011년 이후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왔다.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은 도시와 농촌지역에 골고루 이주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귀농귀촌에 국한된 이주가 아니라 창업, 기업이전, 교육정착의 목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결과이다.

그 중 문화예술분야와 관련한 이주는 “문화 이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의 분야는 전체 정착주민 인구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지만 실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큰 편이다. 이들은 기존의 삶을 벗어나 새로운 활동을 위하여 제주로 이주하였고, 제주에 새로운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과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그들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제주 이주민의 유출 문제는 최근 도심 지역에서 자주 언급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는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제주도 역시 구좌읍의 월정리와 연동의 바오젠거리 등의 도시에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 임대료가 급등함으로써 원주민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제주 이주민의 유출 문제는 타 지역과는 달리 ‘지역문화와의 융화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분석된다(제민일보, 2019). 그동안 제주 이주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제주 이주민과 토착민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두 집단 간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과 토착민간의 심리·사회·문화적 갈등의 양상과 그 근본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김주호 외, 2020).

3.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영향요인

갈등의 원인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그렇지만 갈등은 희소성을 갖는 자원에 대한 경쟁, 제도 및 계층 간의 투쟁, 인간의 본능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Thomas & Schmidt(1976)는 갈등의 원인을 가치와 목표의 차이, 의사소통의 실패, 성향의 충돌, 제한된 자원, 규제 및 정책에 불복, 권위에 따른 문제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Dubrin(1984)은 갈등은 제한된 자원에의 경쟁, 목표의 차이, 역할에 따른 갈등에서 그 원인을 찾았고, Baron(1984)은 신분이나 권력 그리고 희소한 자원 등과 같은 가치들이 평등하게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못한 이유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Simon & March(1958)는 개인적 갈등의 원인으로 모든 대안이 만족스럽지 못한 비수락성(unacceptability), 어떠한 대안이 나은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비비교성(incomparability), 그리고 각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uncertainty)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복수 주체 간의 갈등 즉, 집단 간 갈등의 원인 및 조건으로 공동 의사결정의 필요성(need for joint decision - making)이 있고, 행동 주체 간에 목표의 차이(difference in goals)가 있거나, 사실에 대한 인지의 차이(difference in perception)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Fink(1968)는 둘 이상이 서로 적대적인 심리관계에 있거나 적대적인 상호작용의 형태에서 연결된 사회적 상황에서 갈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이나 집단이 의식하는 것들이 그들의 소원, 의무,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불일치를 이루는 행위들이 실현되기를 원할 때 발생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갈등이라는 것은 가치관의 차이, 이해관계의 충돌, 절차상의 문제, 법제도의 미비, 과학 기술의 한계 등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았다(김중호 외, 2004). 소영진(1999)은 조직 공동체나 구성원이 희소한의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를 서로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학자들의 관점에 따른 다양한 갈등의 원인을 종합하면, 갈등은 희소한 자원에 따른 경쟁, 이해관계의 충돌, 정보의 왜곡과 차단, 목표의 상충,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1) 제도적 요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정착주민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전 이주민과 관련한 조례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2007. 5),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2008. 4),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조례」(2010. 4)가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의 관련 조례들을 연계하여 융·복합한 조례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4월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착주민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고 선주민인 도민과 정착주민 간 상생과 협력을 촉진하여 정착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착주민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의 실시, 위원회 설치, 정착주민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착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정착주민 지원위원회 및 정주환경 개선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정착주민 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이주와 관련한 종합 상담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도와 행정시 읍면동을 포함한 46개소에 정착주민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정착주민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정착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착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정착주민과 관련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생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여 제주에 관한 이해를 돕고, 귀농·귀촌, 다문화가족, 취업 및 고용지원 등 분야별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정착주민과 선주민간의 융화와 협력을 위하여 정착주민 지역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정착주민 지역융화 홍보를 위하여 정착주민과 선주민 간의 상생과 발전 사례 홍보를 지원해주고 있다(이화진, 2016).

2014년 제정된 조례를 2017년에는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였다. 조례에 의해 2년 마다 실시되는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착지원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7월 15일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종결된 효돈천(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을 둘러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와 하효동 마을 간 갈등은 최초의 마을 간 갈등조정 사례이다.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지역에서 표출되었거나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회갈등을 해소 및 예방적 차원의 관리를 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활용하고자 사회협약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협약제도는 사회갈등, 현안 문제를 자율적 합의 형성 과정을 통하여 예방하거나 해결하여, 사회통합 및 도민통합에 기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정착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은 기존 선주민들에게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주기도 한다는 역차별적인 사고가 존재하고 있다(전형준, 2023)

2) 행태적 요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1)에 의하면 농촌에 거주를 희망하는 이유 중는 ‘도시의 경쟁적인 삶을 떠나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과거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귀촌 이주를 선택했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귀촌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삶의 만족도 향상이라는 새로운 이유로 인해 귀촌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흡수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귀촌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착주민들은 자신들과 다른 언어, 생활방식 등 선주민과의 차이를 기반으로 정착주민-선주민이라는 이분법적 사회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외부인이면서 내부인인 정착주민의 위치성은 정착주민들은 마을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정착주민이라는 입장에서 비교적 순응하고 적응하려는 수동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대규모 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인으로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보호를 주장하는 수호자적 입장을 취하는 양가적 정체성을 보인다. 정착주민의 위치성은 선주민의 행태를 다시보게 하면서도 제주를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주체성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도시인이 촌에 들어오면서 문화적 차이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선주민의 관행적 농·어업과 정착주민의 생태환경농업에 따른 영농방식 등에서 오는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떤 상황이 되면 행동으로 표출될 개연성이 있다. 또한 공동체로서의 삶과 개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질성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도 존재한다(김경준·김성수, 1998).

그러나 이주의 동기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공동체적 규범을 내면화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도시에서 온 정착주민이라고 하여 개인주의적 성격이 무조건 강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하여 모두가 도시적 특성을 고집한다는 증거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도시에서 온 정착주민은 도시적 특

성을 반영한다거나 농촌사람은 무조건 농촌사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환경론적인 시각은 결정주의적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송인하, 2016).

3) 경제적 요인

교환이론은 개인이 효용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보상과 비용을 계산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개인에게 가치 있는 자원을 교환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교환은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으로서 집단적인 삶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사람들은 집단에 가치 있는 자원을 보장하고 비용을 발생하는 것을 피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구조를 형성한다. 공정한 교환을 위반하거나 기대했던 보상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환 구조는 일대일 관계의 직접 교환, 모든 구성원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생산적 교환 모든 행위자가 간접적으로 호혜적 의존 관계에 있는 일반화된 교환형태가 있다(Carter, 2016). 마을 사업 참여는 구성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생산적 교환 형태에 해당한다. 합리적인 행위자는 연대감을 통하여 얻은 경험에 대한 보상을 즐기고 싶지만 연대감을 생산에 드는 비용은 회피하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집단은 사회적 통제를 실시한다(Turner, 2014).

정착주민들은 나름대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주어진다면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다(마상진 등, 2015). 박대식·남승희(2015)는 귀촌인들은 ‘마을 회의나 행사,’ ‘지역사회 공익 봉사 활동’에 있어서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가 낮았다고 하였으며. 귀촌인의 공동체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요인에는 ‘친목 도모’나 ‘인맥 활동’이 있었고, 반대로 피하게 되는 요인에는 ‘기회나 정보 부족,’ ‘시간 부족’ 등이 있었다. 결국 지역사회 활동 참여는 우정이나 유대감 등 친목 도모나 개인 시간 확보 등이 교환을 활성화시키거나 방해시키는 매개물로 판단된다. 한편, ‘각종 지원을 당연시 하는 귀농인과 귀촌인의 태도’, ‘농촌의 폐쇄성으로 인한 귀농인과 귀촌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귀농인과 귀촌인의 증가로 인해 마을의 농업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오해’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쟁관계로의 인식’, ‘소통 부족과 무관심’, ‘유언비어 및 인신공격’과 ‘토지 및 재산권 침해문제’, ‘영농방식에 대

한 견해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4) 사회문화적 요인

편견적 태도에는 중요시하는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과 자신에 대한 위협적 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담겨 있다(김혜숙, 2007).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이나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타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한 연구들은 190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는 미국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인종 간 갈등으로 야기된 사회문제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특히 1943년 디트로이트 인종 폭동이 갈등에 대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 1950년대 들어서 뉴욕시의 공공주택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Allport(1954)는 자신의 저서에서 편견과 관련해 접촉이론을 소개하였다.

Allport의 접촉이론은 두 집단의 접촉이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줄인다고 보는 것으로, 특히 다음의 상황적 조건들이 갖추어 졌을 때 더욱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첫째, 두 집단이 동일한 지위여야 하고, 둘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집단 간에는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넷째, 법·관습에 의한 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 집단 간 접촉이 있을 때 편견은 줄어들고,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시킨다고 하였다. 물론 이 네 가지 조건은 편견을 줄이기 위한 접촉을 만들어내는 최적의 환경만을 제시한 것으로, 필수조건은 아니다. 이후에도 50년이 넘도록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접촉이론에 대한 지속적인 실험을 실시한 결과, 위의 네 조건이 부합되었을 경우, 또는 위와 동일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접촉이 편견에 대해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일반화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지은 외, 2021).

그러나 집단 간 접촉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이미 특정 집단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서로 접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더 나아가 두 집단이 경쟁적인 상황에 처해있으면 반복되는 두 집단의 접촉은

오히려 편견적 태도를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접촉이론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과거 오랜 기간 분쟁이 있었던 집단 간 접촉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접촉이론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는 중요한 논쟁거리로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접촉에 대해서도 접촉의 질과 양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일관된 접촉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접촉의 대상이 이민자, 난민, 노인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소수집단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국적 및 민족적 정체성은 북미 및 유럽, 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였다(송유진, 2013). 관련 연구들을 통하여 접촉의 질과 양을 비교해보면, 태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력을 비교하였고, 접촉의 빈도에 대해서는 대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응답자들은 스스로가 자기 평가에 근거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특정 집단에 대한 일반화된 태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긍정적인 접촉 경험은 상대가 속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일반화된 우호적인 감정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은 사이에서는 향약이라는 것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하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삶에 대한 형태로서 상호 협동 정신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향약의 4대 정신에서는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필수 덕목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향약은 당시의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의 세대에 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의 고유한 미풍양속문화로 협동과 단결하는 생활태도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향약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과 유대감 및 연대 의식을 길러주기도 한다. 따라서 향약은 마을자치를 잘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마을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배려할 수 있는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이웃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소위 상부상조와 협동 정신이 담겨져 있다. 이것이 바로 향약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김일순 외, 2021).

5) 지역성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제주의 고유문화로 ‘귤당’이라는 용어가 있다. 귤당이란 ‘친척 사이의 끈끈한 결속감’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가까운 이웃이나 조직, 그리고 집단들이 사이에서 공유하는 결속력 강한 공동체 문화를 뜻한다. 최근 관계론적 관점에서 사회 속의 관계(relation)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설명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 같이 제주의 귤당문화 역시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자본이라는 개념은 생산의 절대적 요소인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을 의미하지만, 전통적 자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개인의 인적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 등의 사회구조적 자원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명명한다(Coleman, 1999). Bourdieu(1986)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면식(mutual acquaintance)이나 인식(recognition) 등을 바탕으로 제도화된 관계로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만이 획득하게 되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다. 특히 사회적 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관계망으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인들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구축 되는데(Burt, 1992)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사회구조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space)안에 있으며(Bullen & Onyx, 1998)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서적 존중감, 관계망 지원(Cobb, 1976), 도구적 표현적 지원(Dean & Lin, 1977), 물질적 행동적 도움과 친밀한 상호작용(소진광, 1999), 정보제공 및 안내, 긍정적인 상호작용(Barerra & Ainlay, 1983) 등을 촉진 시키기 때문에 이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자본은 지역에 대한 애착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인간관계 요인은 이주민의 삶의 질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으며(강수경, 이충기, 2013), 결혼이주여성 및 이민자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웃과의 교류 및 사회적 지원의 부족이 한국 정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Jeong & Hyun, 2008; 최은숙, 이연정, 2014)

제주의 중요 ‘사회적 자본’의 하나로 이해되는 ‘귤당문화’는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부정적 영향도 미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 구성원들이 서로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협력하고 도와주는 ‘귤당문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권당문화’가 낯선 땅 제주의 삶을 살아가는 정착주민들에게 많은 의지와 위로가 된다고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입장에서는 ‘권당문화’는 제주를 지역동질적인 사회로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행위에 대한 일치성을 강요하기 때문에(황경수, 2015) ‘권당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지역공동체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착주민들의 실질적인 행동은 이들을 향한 선주민들의 텃세문화라는 인식을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 정착 실패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김주호 외,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관계론적 관점’에서 선주민과 정착주민의 전반에 걸친 차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정착주민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의 원인으로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 ‘가치관이 달라서’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나, 선주민의 텃세나, 정착주민의 과시, 무시, 우월감도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다(제주특별자치도, 2019). 이주민은 선주민과 생활방식과 가치관이 달라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마을의 정서를 몰라 제주문화에 적응이 어렵다. 이처럼 선주민과 문화와 가치관이 다른 이주민들은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음은 제주의 역사와 외지인에 대한 배타성이다. 지리적으로 제주는 한반도 가장 남단에 자리잡은 섬이다. 지리적으로 주변부에 있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중요도에 있어서도 주변부로 분류된다. 전국 사회조사들에 있어서 제주가 가지는 비중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사실상 제주는 12세기까지 탐라라는 독립국으로 존재해 왔다. 이후 고려 시대에는 자치 통치 체계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고려의 속국 지위에 놓여 있었고, 조선 초부터 지금의 우리가 인식하는 지방으로 편입되어 중앙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유배자들이 보내지는 곳이었으며, 200년간 육지로의 이동이 금지되기도 했다(박찬식 외, 2011). 이후에는 이재수의 난과 4.3사건을 겪었다. 통상적으로 외부로부터의 고립 및 핍박은 집단을 구별하는 의식을 높아지게 한다. 박찬식 외(2011) 역시 이들 사건들을 통해 제주섬 밖에서부터 유입된 외지인과 외래문화 등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에 근거한 ‘억눌림의 정서’가 생겨났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제주출생의 개인들은 특정한 집단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집단정체성이 타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

과들로 미루어 볼 때(Vedlitz & Zahran, 2007), 제주출생의 선주민은 집단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 개인과 비교하여 정착이 주민에 대해 더 배타적 태도를 가질 것이다.

4. 선행연구 검토

한지은 외(2021)는 제주가 신유형의 이주민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자리잡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주 정착이 주민의 적응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매해 적응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정착이주민이 늘고 있다고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정착이주민의 관점에서 이주를 다뤘다면, 한지은 외(2021)는 선주민의 입장에서 이주민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읍·면부로 이주하는 양상을 염두에 두어 고령화된 지역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고령의 선주민 태도를 확인하였다. 이들 고령의 선주민이 이주민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고령자 관련 특성, 제주 관련 특성, 코로나19(COVID-19) 영향, 접촉경험. 전반적인 인간관계와 독거여부, 영양 상태가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제주출생인 선주민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이주민의 유입에 부정적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수록 이주민의 유입을 꺼렸다. 마지막으로 정착이주민과의 개인적 접촉을 통해 긍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을수록 정착이 주민의 유입을 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착이주민에 대한 선주민의 태도를 살펴보고, 고령의 선주민과 신유형의 정착이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며 한 지역사회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상준·오영균(2018)은 세종시 지역사회의 특징인 사회갈등과 사회자본의 수준이 지방정부차원의 갈등해소방안 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때, 정부의 갈등관리 노력에 대한 인식이 매개하는지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더불어 세종시 지역주민을 원주민과 이주민으로 구분하여 집단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등의 분석방법을 적용한 결과, 정부의 갈등관리 노력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주민과 이주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갈등구도에

서 무분별한 ADR의 적용보다는 정부의 갈등관리 노력의 중요성을 정책적 함의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세종시 지역사회에 대한 특징을 연구한 논문이 거의 없었는데, 이러한 선행연구의 간극을 매웠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평가하였다.

김인성 외(2017)은 최근 제2의 인생설계, 건강, 퇴직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본거지에서 타지역으로 삶의 근거지를 옮기는 이주민들의 이주특성 및 이주적응도를 살펴보고, 이주민들이 이주대상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제주지역에 이주한 도시민의 이주특성 및 이주적응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향후 정착이주민 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및 지역민과 이주민들을 융합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성일 외(2016)는 현재 귀농·귀촌자들이 겪고 있으며, 앞으로 귀농·귀촌을 할 예정인 준비자들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갈등의 요인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갈등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역 귀농·귀촌 방지 및 귀농·귀촌에 대한 두려움 해소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귀농·귀촌의 경험여부에 따라 귀농·귀촌에서의 갈등 및 문제점을 예방 및 관리하고, 귀농·귀촌자의 농어촌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의 갈등관리방안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귀농·귀촌 경험자 집단과 귀농·귀촌 준비자 집단을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귀농·귀촌 갈등인식에 대해서는 귀농·귀촌 준비자 집단이 좀 더 높게 갈등을 예상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문화적 갈등요인보다는 경제·생산적 갈등요인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귀농·귀촌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갈등인식이 더 높은 귀농·귀촌 준비자 집단이 갈등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높은 필요성을 나타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구조적 갈등관리보다는 개별적 갈등관리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주호 외(2020)는 제주도는 최근 들어 정착에 실패하고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는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발전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며, ‘뜨는’ 제주를 찾아온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제주를 ‘뜨는’ 원인을 심리, 사회, 문화 등의 통합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제주 특유의 상황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3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연구는 정성적연구

구방법(qualitative research)을 통해 이주민들이 직면하는 제주 적응상의 어려움을 크게 교육환경, 의료환경, 쇼핑·문화, 지역정서, 교통, 상업활동, 이주민정책 등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2차 정량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에서는 7개 영역 중 ‘교육환경’, ‘쇼핑·문화’, ‘지역정서’, ‘상업활동’, ‘이주민정책’ 등의 5개 영역에서 이주민과 토착민 간의 차이점과 이주민과 토착민 간의 사회적 거리감과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검증하였다. 3차 연구는 1차 연구 및 2차 연구의 결과물에 다양한 참고문헌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제주 이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문화융합 척도개발’의 주요 구성요소를 교육환경, 의료시설, 문화와 여가, 지역정서, 주거와 교통, 경제활동, 복지과 안전, 이주민정책 등 8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총 36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김태균·박상혁(2019)은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문제가 농촌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미치는 후유증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태균·박상혁(2019)은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요인을 두 주체 간 입장에서 도출하고, 갈등요인에 따른 해결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갈등해결 전략차이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를 정립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내용을 토대로 갈등요인을 도출하고, 갈등요인에 따른 해결전략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xelrod(2009)가 개최한 ‘컴퓨터 최수의 딜레마 대회’에서 사용되었던 대응전략 중에서 5가지 전략을 선택해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 알아보았다.

한갑운·한갑원(2018)은 귀농·귀촌인이 늘어날 수로 원주민과의 갈등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며, 과거에 농촌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귀농·귀촌인에게만 지원정책을 펼친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귀농·귀촌의 목적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재에 귀농을 전제로 한 지원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귀농인보다 귀촌인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농업을 매개로한 관계 형성만으로 갈등을 해소하기란 역부족함을 지적하며,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 30~50대 귀농·귀촌인의 증가는 기존의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의 갈등 이외에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갈등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원주민, 귀농·귀촌인, 갈등해소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갈등 관리 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겠다. 또한 귀

농·귀촌인에게만 교육되어졌던 갈등해소교육을 원주민에게도 제공함으로써 같은 지역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은재(2022)는 다큐멘터리 영화 ‘그림 그리는 해녀’를 통해서 제주의 ‘해녀’와 해녀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했던 ‘문화 이주민’ 각자의 관점에서 제주 지역사회 중심 미술교육 경험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제주 지역의 사회문제인 이주민의 증감에 따른 지역 갈등 문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는 지역사회 중심 미술교육의 다양한 담론을 고찰하고, 제주의 전통적 공동체인 해녀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미술교육을 기획하고 실천한 문화 이민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다큐멘터리 영화 ‘그림 그리는 해녀’의 등장인물 내러티브를 분석했다. 문화 이주민은 제주 지역사회와의 융화를 자만했던 과거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으며 해녀의 삶에 대한 이해와 존경으로 이어짐을 밝혔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미술교육의 경험은 구성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II-1>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도)	연구내용			연구대상	연구방법
	독립변수	매개(조절)변수	종속변수		
한지은 외 (2021)	고령자 관련 특성, 제주 관련 특성, 코로나19(COVID- 19) 영향, 접촉경험. 전반적인 인간관계와 독거여부, 영양 상태	-	정착이주민에 대한 태도	제주 고령 선주민	회귀분석
신상준 ·오영균 (2018)	사회갈등 인식, 사회자본	지방정부의 갈등해소 노력	지방정부의 갈등해소 방안 필요성	세종시민	구조방정식
김인성 외 (2017)	이주준비기간 제주정착기간 이주유형 사업수혜여부 이주비용		이주적응도 생활만족도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만족도 및 정책지원 만족도	제주 이주민	회귀분석

이성일 외 (2016)	귀농귀촌 경험자 귀농귀촌 준비자		귀농귀촌 갈등요인 귀농귀촌 갈등관리 필요성	귀농귀촌 경험자 귀농귀촌 준비자	독립표본 t-test
김주호 외 (2020)	교육환경, 의료환경, 쇼핑·문화, 지역정서, 교통, 상업활동, 이주민정책	-	문화융화척도	제주 선주민과 이주민	전문가 인터뷰
김태균 ·박상혁 (2019)	갈등요인 23가지	올디, 랜덤, 텃포켓, 다우닝, 올씨	갈등	경남지역 12곳 귀농·귀촌인	최수의텔레마
한갑운 ·한갑원 (2018)					심층면접
정은재 (2022)	-	-	-	제주 문화 이민자	심층면담, 내러티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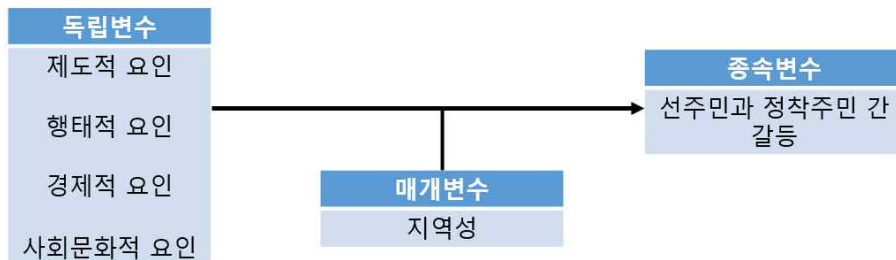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의 설계 및 가설설정

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우선,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제도적 요인, 행태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로 지역성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제도적 요인의 경우 정착주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프로그램,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행태적 요인은 서로의 상대방인 선주민과 정착주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경제적 요인은 상대방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사회문화적 요인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 지역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마을회 등에 대한 신뢰, 고민을 상담할 이웃 등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매개변수인 지역성은 관당문화를 중심으로 공동화문화에 대하여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은 갈등의 경험과 상황에 대한 인지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1> 연구모형

2) 가설설정

본 연구는 독립변수로 제도적 요인, 행태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을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으로, 매개변수로는 지역성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영향 요인을 밝히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설계하였다. 본 가설은 제도적 요인, 행태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지역성,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의 6가지 변수를 사이에 둔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설정은 첫째, 제도적 요인, 행태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은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둘째, 제도적 요인, 행태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은 지역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셋째, 지역성이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넷째, 제도적 요인, 행태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과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에서 지역성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이상의 연구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연구 가설의 검증은 선주민과 정착주민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수행하였다.

연구 가설 1. 제도적 요인은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2. 행태적 요인은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3. 경제적 요인은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4. 사회문화적 요인은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5. 지역성은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6. 지역성은 제도적 요인, 행태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과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를 보

일 것이다.

연구 가설 6-1. 지역성은 제도적 요인과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연구 가설 6-2. 지역성은 행태적 요인과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연구 가설 6-3. 지역성은 경제적 요인과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연구 가설 6-4. 지역성은 사회문화적 요인과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3) 연구의 대상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23년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실시를 하였으며, Google Form을 활용하여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설문지 376부(선주민 276부, 정착주민 100부)를 수집하였다.

선주민과 정착주민에 대한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에서는 정착주민의 개념을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⁶⁾, <제주 정착주민 기본계획(2022_2025)>에서는 거주기간 10년까지의 정착주민을 대상으로 현황과 실태조사를 파악을 실시하였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 정착주민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도 거주기간 10년을 기준으로 10년 이상의 경우 선주민, 10년 미만의 경우 정착주민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선주민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선주민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6)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제2조

2. “정착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별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189명(68.5%), 여성은 87명(31.5%)로 남성이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대(20세~29세)가 27명(9.8%), 30대(30세~39세) 71명(25.7%), 40대(40세~49세) 91명(33.0%), 50대(50세~59세) 61명(22.1%), 60대(60세~69세) 42명(8.7%), 70대 이상 2명(0.7%)로 30~5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거주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주시 동(洞)지역 217명(78.6%), 제주시 읍면지역 27명(9.8%), 서귀포시 동(洞)지역 22명(8.0%), 서귀포시 읍면지역 10명(3.6%)로 제주시 동(洞)지역의 응답자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구원 수 1명이 35명(12.7%), 2명이 58명(21.0%), 3명이 75명(27.2%), 4명이 80명(29.0%), 5명 이상이 28명(10.1%)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혼/사실혼(동거)가 166명(60.1%), 미혼 84명(30.4%), 이혼/별거/사별 26명(9.4%)로 기혼/사실혼(동거)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35명(12.7%), 전문대(2,3년제) 재학/졸업은 67명(24.3%),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졸업은 117명(42.4%),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57명(20.7%)로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졸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1> 선주민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276	100.0
성별	남성	189	68.5
	여성	87	31.5
연령	20세 ~ 29세	27	9.8
	30세 ~ 39세	71	25.7
	40세 ~ 49세	91	33.0
	50세 ~ 59세	61	22.1
	60세 ~ 69세	24	8.7
	70세 이상	2	0.7
거주지	제주시 동(洞)지역	217	78.6

	제주시 읍면지역	27	9.8
	서귀포시 동(洞)지역	22	8.0
	서귀포시 읍면지역	10	3.6
가구원 수	1명	35	12.7
	2명	58	21.0
	3명	75	27.2
	4명	80	29.0
	5명 이상	28	10.1
혼인상태	기혼/사실혼(동거)	166	60.1
	미혼	84	30.4
	이혼/별거/사별	26	9.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5	12.7
	전문대(2,3년제) 재학/졸업	67	24.3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졸업	117	42.4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57	20.7

(2) 정착주민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정착주민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별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58명(58.0%), 여성은 42명(42.0%)로 남성이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대(20세~29세)가 10명(10.0%), 30대(30세~39세) 32명(32.0%), 40대(40세~49세) 36명(36.0%), 50대(50세~59세) 11명(11.0%), 60대(60세~69세) 10명(10.0%), 70대 이상 1명(1.0%)로 30~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거주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주시 동(洞)지역 68명(68.0%), 제주시 읍면지역 13명(13.0%), 서귀포시 동(洞)지역 10명(10.0%), 서귀포시 읍면지역 9명(9.0%)로 제주시 동(洞)지역의 응답자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구원 수 1명이 28명(28.0%), 2명이 33명(33.0%), 3명이 20명(20.0%), 4명이 18명(18.0%), 5명 이상이

1명(1.0%)로 5명 이상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혼/사실혼(동거)가 72명(72.0%), 미혼 24명(24.0%), 이혼/별거/사별 4명(4.0%)로 기혼/사실혼(동거)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10명(10.0%), 전문대(2,3년제) 재학/졸업은 11명(11.0%),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졸업은 50명(50.0%),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29명(29.0%)로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졸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2> 정착주민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100	100.0
성별	남성	58	58.0
	여성	42	42.0
연령	20세 ~ 29세	10	10.0
	30세 ~ 39세	32	32.0
	40세 ~ 49세	36	36.0
	50세 ~ 59세	11	11.0
	60세 ~ 69세	10	10.0
	70세 이상	1	1.0
거주지	제주시 동(洞)지역	68	68.0
	제주시 읍면지역	13	13.0
	서귀포시 동(洞)지역	10	10.0
	서귀포시 읍면지역	9	9.0
가구원 수	1명	28	28.0
	2명	33	33.0
	3명	20	20.0
	4명	18	18.0
	5명 이상	1	1.0

혼인상태	기혼/사실혼(동거)	72	72.0
	미혼	24	24.0
	이혼/별거/사별	4	4.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	10.0
	전문대(2,3년제) 재학/졸업	11	11.0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졸업	50	50.0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29	29.0

2. 연구방법 및 측정항목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은 모형 내의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 그 기원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지만, 구조방정식 모형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측정모형에 대한 기원은 1990년 전후 Pearson(1896)의 상관관계와 Spearman(1904)의 요인분석이 개발되던 시점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Spearman이 요인분석의 기초를 정립하면서 구조방정식 모형은 개념적 토대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이르면서 구조방정식모형은 사회과학분야에서 핵심적인 통계기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은 다양한 변형된 형태들을 가지고 있어 구조방정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많이 있다(심준섭, 2013).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Chi-square),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R(Root Mean-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rker Lewis Index), NFI(Normed Fit Index) 등이 다양

한 지표들이 있으며 어떤 것을 전체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Kline(1998)은 χ^2 , GFI, NFI, CFI 중에서 한 개, NNFI 그리고 RMR 이렇게 세 개는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Jöreskog & Sörbom (1997)는 LISEREL에서 χ^2 , GFI와 AGFI는 같은 적합도 지표로 보고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적인 검증 방법이 χ^2 검정이다. χ^2 통계량은 모수의 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적합도 함수가 가지는 최소의 값에 (표본의 크기-1)을 곱한 것으로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적합도는 좋고, 크면 클수록 적합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GFI(Goodness of Fit Index)는 χ^2 검정과 마찬가지로 모형평가에 자주 이용되는 적합도 지표로 일반적으로 0.95 또는 0.9이상이면 좋은 상태로 파악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는 GFI와 마찬가지로 1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CFI(Comparative Fit Index)는 McDonald & Marsh(1990)에 의해 제시된 적합도 지수로서 CFI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이 잘 맞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0.95 또는 0.9이상을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CFI는 설정된 모형의 간결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서 의미가 없는 경로가 모형에 포함되더라도 감소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CFI지수 한 가지만을 이용하기 보다는 모형의 간결성을 보는 다른 지수들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MR(Root Mean-square Residual)은 제곱을 계산하여 근호를 씌운 값이므로 음의 값은 가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0.05 이하면 양호하다고 판단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RMSEA(Root 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Browne & Cudeck(1993)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대신에 근사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다. RMSEA 값은 작을수록 설정된 모형이 자료에 잘 맞는 것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0.05보다 작거나 같으면 양호하다고 판단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TLI(Turker Lewis Index)는 Tucker & Lewis(1973)가 처음으로 고안한 것으로 NNFI(Non-Normed Fit Index)라고도 한다. 기초모형에서 보다 더 잘 일치하는 모형이 떨어진 거리를 기초모형과 이상적 적합도 함수 간의 거리의 비율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1에 가까울수

록 좋은 모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TLI는 일반적으로 0.95 또는 0.9 이상일 때 양호하다고 판단하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NFI(Normed Fit Index)는 Bentler & Bonnett(1980)에 의해서 제안된 것으로 자료에 더 잘 일치하도록 모형을 재설정하였을 때, 재설정된 모형이 적합도 함수 값을 얼마나 감소시키는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NFI도 일반적으로 0.95 또는 0.9 이상일 때 양호하다고 판단하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김진수, 2013).

2) 측정항목의 구성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갈등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선행연구들의 문항을 토대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는 제도적 요인, 행태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지역성,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으로 총 6개 이다. 다만, 세부적 문항인 관측변수에는 선주민과 정착주민이 상이하다. 이는 요인분석 및 신뢰도 측정을 통하여 낮은 값을 나타내는 항목을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선주민의 경우 제도적 요인에서 4개의 문항을 관측변수로 활용하였으며, 행태적 요인 2개 문항, 경제적 요인 4개문항, 사회문화적 요인 4개 문항, 지역성 4개 문항,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 4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정착주민은 제도적 요인에서 4개의 문항을 관측변수로 활용하였으며, 행태적 요인 3개 문항, 경제적 요인 4개문항, 사회문화적 요인 2개 문항, 지역성 3개 문항,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 4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설문의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설문의 측정문항은 각각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3> 측정항목 및 참고문헌(선주민)

변수	관측변수	측정항목	참고문헌
제도적 요인	B1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착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윤정 외(2014) 이민수 외(2010) 제주특별자치도(2021)
	B2	정착주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착주민 지원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B4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B5	제주특별자치도는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행태적 요인	C1	나는 정착주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철규 외(2011) 제주특별자치도(2021) 홍성만·최홍석(2008)
	C2	나는 정착주민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요인	D1	나는 정착주민들로 인하여 도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마상진 등(2014) 유정규(1998)
	D3	나는 정착주민들로 인하여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D4	나는 정착주민들로 인하여 수입(급여, 임대수입 등)이 늘었다고 생각한다	
	D5	나는 현재 도내 경제적 상황(물가 등)에 대해 만족한다	
사회문화적 요인	E1	나는 이웃주민(정착주민)을 신뢰한다	오수호(2013) 서병숙 외(1995) 홍성만·최홍석(2008)
	E2	나는 지역사회단체(마을회 등)을 신뢰한다	
	E4	나는 고민이 있을 때 이를 상담할 이웃(정착주민)이 있다	
	E5	나는 이웃들과 교류가 활발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성	F1	나는 제주의 권당문화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김일순 외(2021) 문순덕 외(2014) 오윤정 외(2014) 황경수(2015)
	F3	나는 제주가 혈연·지역·연고주의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F4	나는 제주의 경조사 문화는 유지해야 될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F5	나는 제주의 공동체문화를 좋아한다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	H1	나는 집이나 토지 등 다양한 이유로 정착주민과 갈등을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	이성일(2016) 박대식(2016) 차광주(2010) 최혜진(2004) Smith & Krannich(2000)
	H3	나는 선주민이라는 이유로 정착주민에게 소외당한 경험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다	
	H4	나는 정착주민의 무시를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	
	H6	제주지역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상황에 대한 생각	

<표 III-4> 측정항목 및 참고문헌(정착주민)

변수	관측변수	측정항목	참고문헌
제도적 요인	B1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착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윤정 외(2014) 이민수 외(2010) 제주특별자치도(2021)
	B2	정착주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착주민 지원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B4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B5	제주특별자치도는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행태적 요인	C1	나는 정착주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철규 외(2011) 제주특별자치도(2021) 홍성만·최홍석(2008)
	C2	나는 정착주민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E4	나는 고민이 있을 때 이를 상담할 이웃(정착주민)이 있다	

경제적 요인	D1	나는 정착주민들로 인하여 도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마상진 등(2014) 유정규(1998)
	D3	나는 정착주민들로 인하여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D4	나는 정착주민들로 인하여 수입(급여, 임대수입 등)이 늘었다고 생각한다	
	D5	나는 현재 도내 경제적 상황(물가 등)에 대해 만족한다	
사회문화적 요인	E1	나는 이웃주민(정착주민)을 신뢰한다	오수호(2013) 서병숙 외(1995) 홍성만·최홍석(2008)
	E2	나는 지역사회단체(마을회 등)을 신뢰한다	
지역성	F1	나는 제주의 권당문화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김일순 외(2021) 문순덕 외(2014) 오윤정 외(2014) 황경수(2015)
	F4	나는 제주의 경조사 문화는 유지해야 될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F5	나는 제주의 공동체문화를 좋아한다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	H1	나는 집이나 토지 등 다양한 이유로 정착주민과 갈등을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	이성일(2016) 박대식(2016) 차광주(2010) 최혜진(2004) Smith & Krannich(2000)
	H3	나는 선주민이라는 이유로 정착주민에게 소외당한 경험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다	
	H4	나는 정착주민의 무시를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	
	H6	제주지역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상황에 대한 생각	

IV. 분석결과

1. 선주민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결과(선주민)

(1) 제도적 요인(선주민)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기에 앞서 요인변수별 측정항목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제도적 요인의 측정항목은 4개로 선정하였다. B1, B2, B3, B4 문항 모두 ‘보통이다’에 해당되는 3보다 낮은 평균 2점대를 나타냈다. 따라서 정착지원 프로그램, 정착주민 지원제도를 통한 혜택,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보통보다 낮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IV-1> 제도적 요인 기술통계 결과(선주민)

(N=276)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B1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착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2.74	0.881	1	5
B2	정착주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착주민 지원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2.67	0.917	1	5
B4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2.72	0.906	1	5
B5	제주특별자치도는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50	0.833	1	5

(2) 행태적 요인(선주민)

독립변수인 행태적 요인의 측정항목은 2개로 선정하였다. C1, C2 문항 모두 ‘보통이다’에 해당되는 3보다 낮은 평균 2점대를 나타냈다. 따라서 선주민은 정착주민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2> 행태적 요인 기술통계 결과(선주민)

(N=276)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C1	나는 정착주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2.61	0.870	1	5
C2	나는 정착주민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2.64	0.921	1	5

(3) 경제적 요인(선주민)

독립변수인 경제적 요인의 측정항목은 4개로 선정하였다. D3과 D4 문항은 ‘보통이다’에 해당되는 3보다 낮은 평균 2점대를 나타내고 있어, 선주민은 정착주민으로 인하여 일자리나 수입이 증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D1 문항처럼 선주민은 정착주민들로 인하여 도내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는 점은 보통 수준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내 물가 등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경제적 요인 기술통계 결과(선주민)

(N=276)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D1	나는 정착주민들로 인하여 도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3.02	0.835	1	5
D3	나는 정착주민들로 인하여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2.57	0.861	1	5
D4	나는 정착주민들로 인하여 수입(급여, 임대수입 등)이 늘었다고 생각한다	2.54	0.927	1	5
D5	나는 현재 도내 경제적 상황(물가 등)에 대해 만족한다	1.97	0.859	1	5

(4) 사회문화적 요인(선주민)

독립변수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측정항목은 4개로 선정하였다. E2, E4, E5 문항은 ‘보통이다’에 해당되는 3보다 조금 낮은 평균 2점대를 나타내고 있어, 선주민은 지역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나, 고민을 상담할 이웃, 그리고 이웃과의 교류에 있어서 보통보다 조금 낮은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E1 문항에서와 같이 정착주민에 대한 신뢰부분은 보통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사회문화적 요인 기술통계 결과(선주민)

(N=276)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E1	나는 이웃주민(정착주민)을 신뢰한다	3.13	0.715	1	5
E2	나는 지역사회단체(마을회 등)을 신뢰한다	2.99	0.798	1	5
E4	나는 고민이 있을 때 이를 상담할 이웃(정착주민)이 있다	2.88	1.084	1	5
E5	나는 이웃들과 교류가 활발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2.79	1.030	1	5

(5) 지역성(선주민)

매개변수인 지역성의 측정항목은 4개로 선정하였다. F3과 F4 문항은 ‘보통이다’에 해당되는 3보다 조금 낮은 평균 2점대를 나타내고 있어, 선주민은 주제가 공정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었다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높고, 경조사 문화에 대해서는 보통의 수치에 가까우나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권당문화와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지역성 기술통계 결과(선주민)

(N=276)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1	나는 제주의 권당문화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3.02	0.978	1	5
F3	나는 제주가 혈연·지역·연고주의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2.67	0.997	1	5
F4	나는 제주의 경조사 문화는 유지해야 될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2.93	1.007	1	5
F5	나는 제주의 공동체문화를 좋아한다	3.18	0.899	1	5

(6)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

매개변수인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의 측정항목은 4개로 선정하였다. H3과 H4 문항은 ‘보통이다’에 해당되는 3보다 조금 낮은 평균 2점대를 나타내고 있어, 선주민은 정착주민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거나 들은 적은 있는 경우는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이나 도내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 이상의 응답이 나타났다.

<표 IV-6>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 기술통계 결과(선주민)

(N=276)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H1	나는 집이나 토지 등 다양한 이유로 정착주민과 갈등을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	3.27	1.027	1	5
H3	나는 선주민이라는 이유로 정착주민에게 소외당한 경험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다	2.75	1.058	1	5
H4	나는 정착주민의 무시를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	2.89	1.075	1	5
H6	제주지역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상황에 대한 생각	3.27	0.858	1	5

2) 신뢰도 분석 결과(선주민)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인을 통해 나타난 측정지표와 측정 문항의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값이 일관성 있게 산출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문 응답자로부터 정확한 답변이 유의미한 가치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IBM SPSS25)로 데이터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데이터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했다. AMOS로 신뢰도 검정과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용된 조사도구의 문항 간의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점수의 분산을 고려한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의 값이 0.6 이상~ 0.7 미만이면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0.7 이상~0.8미만이면 양호한 수준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높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 0.772, 독립변수인 제도적 요인 0.893, 행태적 요인 0.837, 경제적 요인 0.780, 사회문화적 요인 0.792, 매개변수인 지역성 0.775로 모두 0.7 이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7> 측정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선주민)

변수	Cronbach's α	항목 수
제도적 요인	0.893	4
행태적 요인	0.837	2
경제적 요인	0.780	4
사회문화적 요인	0.792	4
지역성	0.775	4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	0.772	4

3) 타당도 분석 결과(선주민)

KMO와 Bartlett은 구형성 검정으로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낸다. KMO 값은 0.6 이상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는 p값이 유의수준인 .05 미만으로 나타나면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제도적 요인, 행태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지역성,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주축 요인 추출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베리맥스 회전을 하였다. 그 결과 22개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KMO 값은 0.812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2957.819으로 유의확률이 0.001 미만으로 나타난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에 구성된 항목을 보면 첫 번째인 제도적 요인이 4개 항목, 두 번째인 경제적 요인이 4개 항목, 세 번째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4개 항목, 네 번째인 지역성이 4개 항목, 다섯 번째인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이 4개 항목, 여섯 번째인 행태적 요인이 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적재값은 모두 0.4 이상으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만족하였다.

<표 IV-8> 측정변수의 타당도 분석 결과(선주민)

변수	측정변수	1	2	3	4	5	6
제도적 요인	B1	0.841	0.118	0.075	0.109	-0.010	0.078
	B2	0.851	0.051	0.074	0.131	0.002	0.075
	B4	0.742	0.201	0.171	0.149	-0.039	0.096
	B5	0.678	0.281	0.132	0.252	-0.022	0.237
행태적 요인	C1	0.277	0.070	0.228	0.123	0.169	0.815
	C2	0.129	0.256	0.208	0.100	0.110	0.712
경제적 요인	D1	0.231	0.486	0.254	0.109	-0.067	0.070
	D3	0.127	0.800	0.099	0.139	-0.009	0.070
	D4	0.079	0.818	0.079	0.082	0.017	0.106
	D5	0.325	0.440	0.098	0.229	0.019	0.116
사회문화적 요인	E1	0.138	0.250	0.435	0.219	-0.071	0.184
	E2	0.337	0.136	0.424	0.289	-0.084	0.133
	E4	0.079	0.108	0.810	0.118	0.080	0.123
	E5	0.122	0.119	0.824	0.178	0.139	0.138
지역성	F1	0.137	0.091	0.140	0.593	-0.090	0.043
	F3	0.236	0.112	0.142	0.596	-0.134	0.205
	F4	0.082	0.149	0.013	0.702	-0.007	-0.010
	F5	0.130	0.076	0.297	0.674	0.072	0.064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	H1	0.015	-0.097	0.086	0.015	0.536	0.144
	H3	-0.013	0.064	-0.001	0.007	0.814	0.109
	H4	-0.070	0.058	0.052	-0.010	0.862	0.061
	H6	-0.002	-0.026	-0.027	-0.118	0.497	-0.087
아이겐값		2.976	2.119	2.085	2.076	2.057	1.461
공통분산(%)		13.526	9.630	9.479	9.437	9.350	6.640
누적분산(%)		13.526	23.155	32.634	42.071	51.420	58.060

KMO=0.812, Bartlett's $\chi^2=2957.819(p<.001)$

4)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선주민)

구조방정식의 모형 분석을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나타내는 모형 적합도 지수 중 χ^2 검증, 표준부합지수(NFI), 터커-루이스지수(TLI), 비교부합지수(CFI), 근사오차제곱평균제곱근(RMSEA)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이홍재 외, 2012), 본 연구에서도 이 지수들을 활용하였다.

절대적합지수인 카이제곱 통계량(χ^2) = CMIN은 $p > 0.05$ 기준으로 수용여부 판단하고 근사오차제곱평균제곱근(RMSEA)은 0.1 이하일 때 수용 할 수 있다. 증분부합지수인 터커-루이스지수(TLI)는 0.9 이상, 표준부합지수(NFI)는 0.8 이상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간명부합지수인 비교부합지수(CFI)는 0.9 이상으로 수용기준을 정한다.

분석 결과 기본모형의 절대부합지수의 χ^2 값이 597.607로 나오고 RMSEA값이 0.087로 허용 기준치인 0.1 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증분 적합도는 NFI 값이 0.804, TLI 값이 0.829, IFI 값이 0.859, CFI 값이 0.857으로 기준치인 0.9보다는 낮지만, 일반적인 허용기준치 내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간명적합도는 PNFI 값이 0.675, PCFI 값이 0.720으로 기준치인 1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은 비교적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측정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표 IV-9>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선주민)

모형	χ^2	RMSEA	RMR	NFI	TLI	IFI	CFI	PNFI	PCFI
분석 결과	597.607 (p=0.000)	0.087	0.098	0.804	0.829	0.859	0.857	0.675	0.720
기준	$p < 0.05$	0.1이하	0.5이하	0.9이상	0.9이상	0.9이상	0.9이상	1에 가까울 수록 적합	1에 가까울 수록 적합
평가	좋음	좋음	좋음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5)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선주민)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의한 가설을 검증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행태적 요인과 갈등의 가설검증결과, 경로계수는 0.221(C.R.=3.244)이고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착주민이 선주민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많아질수록 이들 사이에 갈등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연구가설 2>는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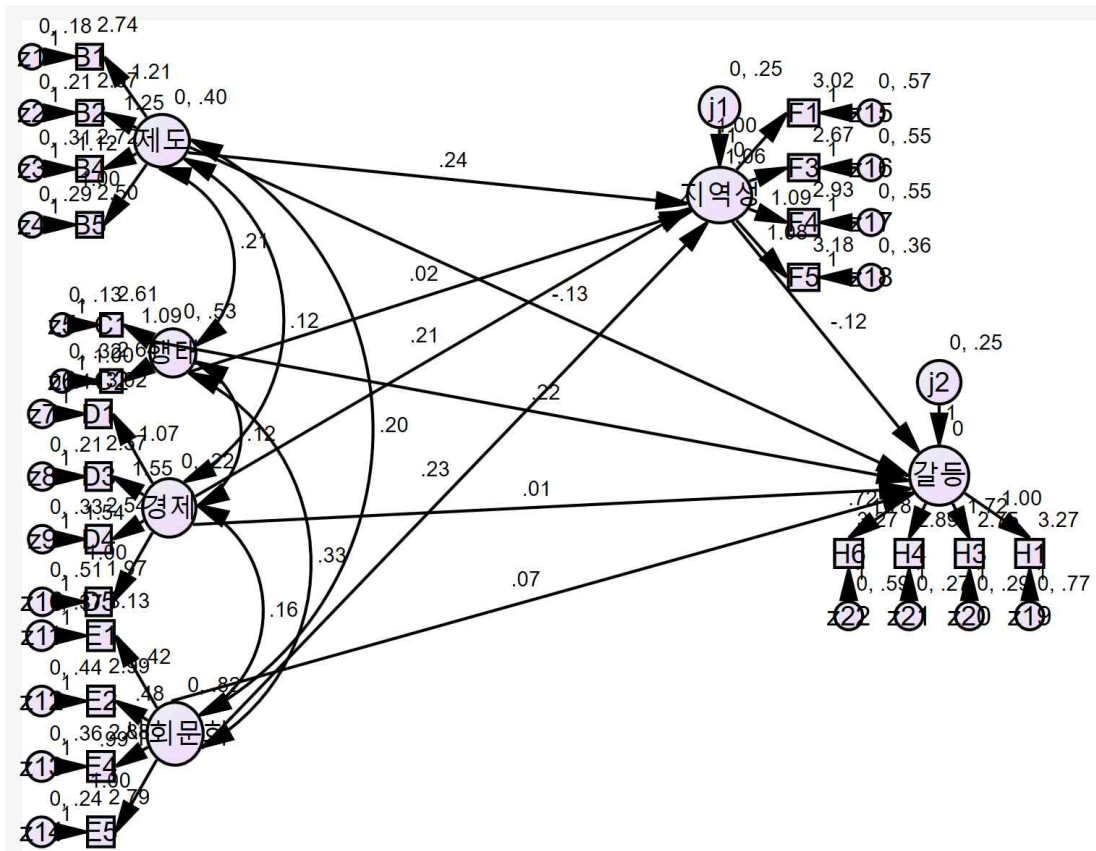
두 번째, 제도적 요인과 지역성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는 0.236(C.R.=3.306)이고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착주민을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갈등관리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을수록 제주 공동체 문화와 권당문화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연구가설 6-1>는 채택되었다.

세 번째, 경제적 요인과 지역성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는 0.213(C.R.=2.208)이고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주민이 정착주민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인식할수록 제주 공동체 문화와 권당문화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연구가설 6-3>는 채택되었다.

네 번째, 사회문화적 요인과 지역성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는 0.232(C.R.=3.964)이고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주민이 정착주민에 대한 신뢰와 교류가 높을수록 제주 공동체 문화와 권당문화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연구가설 6-4>는 채택되었다.

그 외의 가설은 채택과 기각을 판단한 결과 모두 기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가설검증을 위한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IV-1>과 <표 IV-10>와 같다.

<그림 > 경로분석 결과(선주민)



<표 IV-10> 가설분석 검증결과(선주민)

구분	표준화 계수	경로 계수	S.E.	C.R.	P
지역성 ← 제도적 요인	0.241	0.236	0.078	3.036	0.002**
지역성 ← 행태적 요인	0.022	0.019	0.071	0.272	0.786
지역성 ← 경제적 요인	0.161	0.213	0.105	2.028	0.043*
지역성 ← 사회문화적 요인	0.338	0.232	0.059	3.964	***
갈등 ← 제도적 요인	-0.16	-0.133	0.071	-1.865	0.062
갈등 ← 행태적 요인	0.304	0.221	0.068	3.244	0.001**
갈등 ← 경제적 요인	0.01	0.012	0.092	0.125	0.9
갈등 ← 사회문화적 요인	0.113	0.066	0.054	1.221	0.222
갈등 ← 지역성	-0.137	-0.116	0.081	-1.434	0.152

*p<0.05, **p<0.01, ***p<0.001

잠재요인 간의 영향력의 크기를 평가하면 제도적 요인과 지역성 간의 인과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비슷한 구치로 사회문화적 요인과 지역성 간의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검증 결과 경로계수를 보면, 제도적 요인이 지역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0.236이었고, 사회문화적 요인이 지역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0.232였다. 결과값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두 요인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행태적 요인과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에도 인과관계가 나타났는데, 경로계수는 0.221이었다.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도 지역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경로계수는 0.213이었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착주민에 대한 제도가 잘 정비되고, 공동체 관련 제도와 갈등관리에 대한 제도 등을 잘 갖추고 있다면, 제주의 지역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선주민과 이주민이 모두 제주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높일 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선주민은 정착주민의 영향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인식할수록 제주의 지역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선주민과 정착주민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서로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정착주민에 대한 신뢰와 지역사회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지역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공동체 내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생활을 하는 집단일수록 지역성이 높으므로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들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상호 간에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주민이 정착주민으로 관심과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서로 간의 갈등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로에 대한 관심도 도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갈등의 순기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갈등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고 해소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자연스럽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외의 요인들과 지역성,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은 서로 간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지만, 유의미한 영향은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갈등관리에 있어서는 행태적 요인에 대한 평가를 중시해야 할 것이며, 지역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사회문화적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적 호황이 어느정도 동반되어야 그 효과가 발휘될 수 것으로 보았다.

2. 정착주민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결과(정착주민)

(1) 제도적 요인(정착주민)

독립변수인 제도적 요인의 측정항목은 4개로 선정하였다. B1, B2, B3, B4 문항 모두 ‘보통이다’에 해당되는 3보다 낮은 평균 2점대를 나타냈다. 따라서 정착주민은 정착지원 프로그램, 정착주민 지원제도를 통한 혜택,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보통보다 낮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IV-11> 제도적 요인 기술통계 결과(정착주민)

(N=100)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B1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착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2.39	0.963	1	5
B2	정착주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착주민 지원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2.03	0.958	1	4
B4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2.51	1.020	1	5
B5	제주특별자치도는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31	0.961	1	5

(2) 행태적 요인(정착주민)

독립변수인 행태적 요인의 측정항목은 3개로 선정하였다. C1, C2, E4 문항 모두 ‘보통이다’에 해당되는 3보다 낮은 평균 2점대를 나타냈다. 따라서 정착주민은 선주민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12> 행태적 요인 기술통계 결과(정착주민)

(N=100)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C1	나는 선주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2.57	1.018	1	5
C2	나는 선주민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2.66	1.157	1	5
E4	나는 고민이 있을 때 이를 상담할 이웃(선주민)이 있다	2.98	1.271	1	5

(3) 경제적 요인(정착주민)

독립변수인 경제적 요인의 측정항목은 4개로 선정하였다. D1, D3, D4, D5 문항 모두 ‘보통이다’에 해당되는 3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정착주민은 선주민으로 인하여 도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증가, 수입 증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도내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13> 경제적 요인 기술통계 결과(정착주민)

(N=100)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D1	나는 선주민들로 인하여 도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2.79	1.028	1	5
D3	나는 선주민들로 인하여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2.44	0.978	1	5
D4	나는 선주민들로 인하여 수입(급여, 임대수입 등)이 늘었다고 생각한다	2.41	1.045	1	4
D5	나는 현재 도내 경제적 상황(물가 등)에 대해 만족한다	1.97	0.797	1	4

(4) 사회문화적 요인(정착주민)

독립변수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측정항목은 2개로 선정하였다. E1 문항은 보통 수준의 응답을 하여 정착주민을 선주민을 보통 수준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2 문항이 '보통이다'에 해당되는 3보다 낮은 2점대를 기록하여, 지역사회 단체에 대한 신뢰는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사회문화적 요인 기술통계 결과(정착주민)

(N=100)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E1	나는 이웃주민(선주민)을 신뢰한다	3.04	0.875	1	5
E2	나는 지역사회단체(마을회 등)을 신뢰한다	2.74	0.895	1	5

(5) 지역성(정착주민)

매개변수인 지역성의 측정항목은 3개로 선정하였다. F1, F4, F5 문항 모두 '보통이

다’에 해당되는 3보다 낮은 평균 2점대를 나타냈다. 따라서 정착주민은 제주의 권당 문화와 공동체문화에 대해 보통보다 낮은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지역성 기술통계 결과(정착주민)

(N=100)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1	나는 제주의 권당문화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2.65	1.086	1	5
F4	나는 제주의 경조사 문화는 유지해야 될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2.81	1.143	1	5
F5	나는 제주의 공동체문화를 좋아한다	2.85	1.114	1	5

(6)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

종속변수인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의 측정항목은 4개로 선정하였다. H1, H3, H4, H6 문항 모두 ‘보통이다’에 해당되는 3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는 정착주민들이 선주민과의 갈등을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보통 이상이었으며, 선주민들로부터 소외당하거나 무시를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 기술통계 결과(정착주민)

(N=100)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H1	나는 집이나 토지 등 다양한 이유로 선주민과 갈등을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	3.02	1.206	1	5
H3	나는 정착주민이라는 이유로 선주민에게 소외당한 경험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다	3.19	1.152	1	5
H4	나는 선주민의 무시를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	3.47	1.096	1	5
H6	제주지역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상황에 대한 생각	3.52	0.858	1	5

2) 신뢰도 분석 결과(정착주민)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의 값이 0.6 이상~ 0.7 미만이면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0.7 이상~0.8미만이면 양호한 수준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높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본 연구의 측정변수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종속변수인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 0.760, 독립변수인 제도적 요인 0.861, 행태적 요인 0.763, 경제적 요인 0.816, 사회문화적 요인 0.759, 매개변수인 지역성 0.750으로 모두 0.7 이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7> 측정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정착주민)

변수	Cronbach's α	항목 수
제도적 요인	0.861	4
행태적 요인	0.763	3
경제적 요인	0.816	4
사회문화적 요인	0.759	2
지역성	0.750	3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	0.760	4

3) 타당도 분석 결과(선주민)

KMO와 Bartlett은 구형성 검정으로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낸다. KMO 값은 0.6 이상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는 p값이 유의수준인 .05 미만으로 나타나면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제도적 요인, 행태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지역성,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주축 요인 추출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베리맥스 회전을 하였다. 그 결과 22개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KMO 값은 0.756으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901.895으로 유의확률이 0.001 미만으로 나타난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에 구성된 항목을 보면 첫 번째인 제도적 요인이 4개 항목, 두 번째인 경제적 요인이 4개 항목, 세 번째인 행태적 요인이 3개 항목, 네 번째인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이 4개 항목, 다섯 번째인 지역성이 3개 항목, 여섯 번째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적재값은 모두 0.4 이상으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만족하였다.

<표 IV-18> 측정변수의 타당도 분석 결과(정착주민)

변수	측정변수	1	2	3	4	5	6
제도적 요인	B1	0.845	0.124	0.025	0.042	0.046	0.136
	B2	0.753	0.124	0.062	0.015	0.199	0.085
	B4	0.687	0.041	0.353	-0.076	0.185	0.062
	B5	0.720	0.097	0.204	-0.043	0.018	0.071
행태적 요인	C1	0.126	0.090	0.809	-0.031	0.111	0.006
	C2	0.198	-0.031	0.831	-0.046	-0.023	0.136
	E4	0.143	0.039	0.515	0.022	0.154	0.261
경제적 요인	D1	0.108	0.687	0.048	-0.093	0.121	0.217
	D3	0.071	0.923	-0.021	0.010	0.134	-0.036
	D4	0.058	0.706	0.024	-0.043	0.169	0.034
	D5	0.290	0.531	0.119	-0.138	0.282	0.075
사회문화적 요인	E1	0.096	0.050	0.270	-0.082	0.117	0.690
	E2	0.225	0.216	0.088	0.066	0.269	0.774
지역성	F1	0.159	0.222	0.035	-0.103	0.509	0.028
	F4	0.075	0.297	0.002	0.061	0.554	0.201
	F5	0.139	0.132	0.252	0.024	0.908	0.205
갈등	H1	-0.046	0.056	0.116	0.543	0.147	-0.015
	H3	0.022	-0.053	-0.089	0.739	-0.133	-0.036
	H4	-0.054	-0.039	-0.047	0.838	-0.050	-0.123
	H6	0.049	-0.244	-0.088	0.563	-0.040	0.234
아이겐값		2.570	2.427	1.976	1.929	1.772	1.407
공통분산(%)		12.850	12.134	9.880	9.646	8.860	7.033
누적분산(%)		12.850	24.984	34.864	44.510	53.370	60.403

KMO=0.756, Bartlett's $\chi^2=901.895(p<.001)$

4)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정착주민)

절대적합지수인 카이제곱 통계량(χ^2) = CMIN은 $p > 0.05$ 기준으로 수용여부 판단하고 근사오차제곱평균제곱근(RMSEA)은 0.1 이하일 때 수용 할 수 있다. 증분부합지수인 터커-루이스지수(TLI)는 0.9 이상, 표준부합지수(NFI)는 0.8 이상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간명부합지수인 비교부합지수(CFI)는 0.9 이상으로 수용기준을 정한다.

분석 결과 기본모형의 절대부합지수의 χ^2 값이 231.557로 나오고 RMSEA값이 0.071로 허용 기준치인 0.1 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RMR값은 0.098로 기준치인 0.5 이하로 적절하였다. 증분 적합도는 NFI 값이 0.763, TLI 값이 0.881로 기준치인 0.9 보다는 낮지만, 일반적인 허용기준치 내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IFI 값은 0.907, CFI 값 0.903으로 기준치인 0.9보다 높아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명적합도는 PNFI 값이 0.622, PCFI 값이 0.736으로 기준치인 1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은 비교적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측정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표 IV-19>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정착주민)

모형	χ^2	RMSEA	RMR	NFI	TLI	IFI	CFI	PNFI	PCFI
분석 결과	271.866 ($p=0.000$)	0.071	0.098	0.763	0.881	0.907	0.903	0.622	0.736
기준	$p < 0.05$	0.1이하	0.5이하	0.9이상	0.9이상	0.9이상	0.9이상	1에 가까울 수록 적합	1에 가까울 수록 적합
평가	좋음	좋음	좋음	낮음	낮음	좋음	좋음	양호	양호

5)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정착주민)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의한 가설을 검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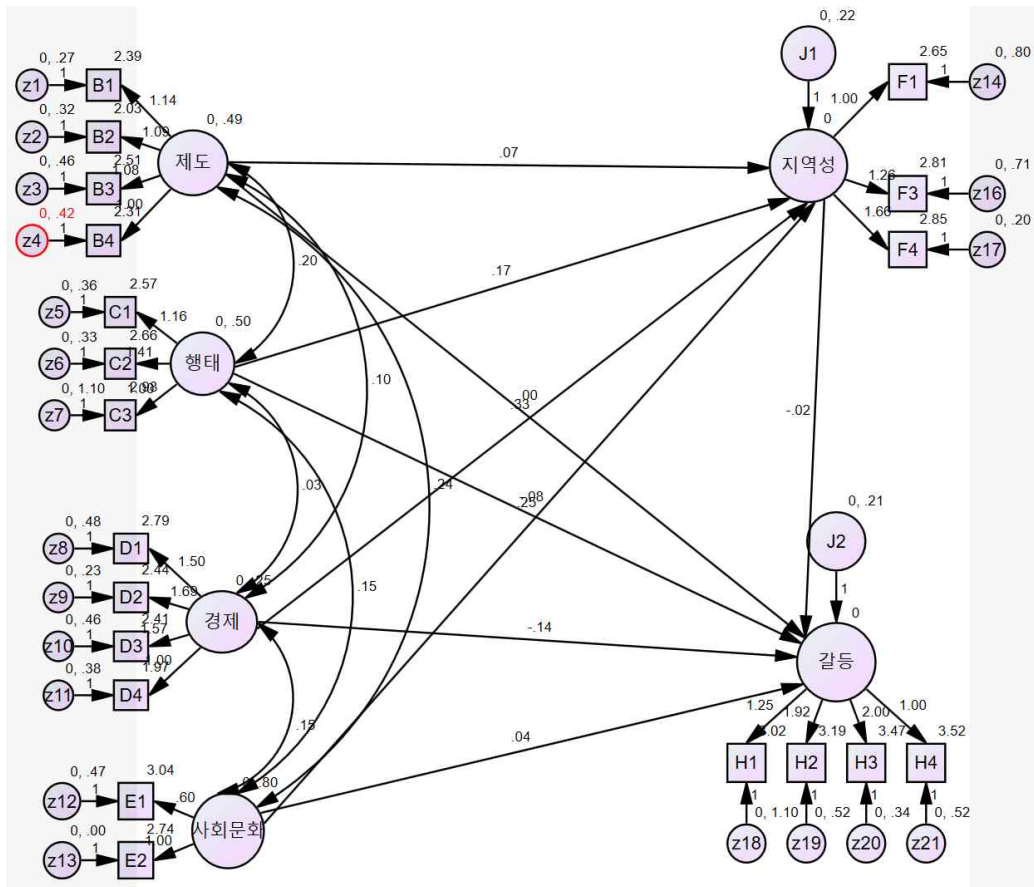
첫 번째, 경제적 요인과 지역성의 가설검증결과, 경로계수는 0.329(C.R.=2.233)이고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착주민이 선주민으

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인식할수록 제주 공동체 문화와 관광문화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연구가설 6-3>는 채택되었다.

두 번째, 사회문화적 요인과 지역성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는 0.246(C.R.=2.436)이고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착주민이 선주민에 대한 신뢰와 교류가 높을수록 제주 공동체 문화와 관광문화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연구가설 6-4>는 채택되었다.

그 외의 가설은 채택과 기각을 판단한 결과 모두 기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가설검증을 위한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과 <표>와 같다.

<그림 IV-2> 경로분석 결과(정착주민)



<표 IV-20> 가설분석 검증결과(정착주민)

구분	표준화 계수	경로 계수	S.E.	C.R.	P
지역성 ← 제도적 요인	0.078	0.068	0.104	0.651	0.515
지역성 ← 행태적 요인	0.195	0.168	0.102	1.652	0.098
지역성 ← 경제적 요인	0.271	0.329	0.147	2.233	0.026*
지역성 ← 사회문화적 요인	0.36	0.246	0.101	2.436	0.015*
갈등 ← 지역성	-0.026	-0.02	0.122	-0.164	0.87
갈등 ← 제도적 요인	0.005	0.004	0.095	0.038	0.97
갈등 ← 행태적 요인	-0.116	-0.076	0.092	-0.82	0.412
갈등 ← 경제적 요인	-0.152	-0.141	0.131	-1.073	0.283
갈등 ← 사회문화적 요인	0.07	0.036	0.072	0.508	0.612

*p<0.05, **p<0.01, ***p<0.001

잠재요인 간의 영향력의 크기를 평가하면 경제적 요인과 지역성 간의 인과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요인과 지역성 간의 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증 결과, 경로계수를 보면 경제적 요인이 지역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0.329였으며, 사회문화적 요인이 지역성에 미치는 영향은 0.246으로 나타났다. 두 요인 모두 큰 값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았지만, 정착주민이 생각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정착주민은 선주민의 영향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인식할수록 제주의 지역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선주민과 정착주민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서로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선주민에 대한 신뢰와 지역사회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지역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공동체 내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생활을 하는 집단일수록 지역성이 높으므로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들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상호 간에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비교 분석

1) 기술통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주민과 정착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각각 제작하였고, 이에 대한 설문을 수행한 후, 타당도 분석을 통하여 요인을 정제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다만, 본 기술통계 비교 분석은 선주민과 정착주민의 인식에 대한 비교로 정제 과정에 포함되어 삭제한 세부요인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하였다.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인식의 차이가 0.3p 이상 되는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도적 요인과 관련하여 선주민과 정착주민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착주민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졌다고 보통 이하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선주민이 정착주민 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착주민 지원제도를 통한 혜택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두 집단 모두 보통 이하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선주민은 정착주민보다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선주민들은 정착주민들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보통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정착주민들은 선주민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보통 이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성과 관련하여 선주민은 권당문화에 대해 보통 수준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정착주민은 보통 이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제주가 공정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보통 이하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선주민이 정착주민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공동체 문화의 선호도에 대해서는 선주민은 보통 수준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정착주민은 보통 이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과 관련하여 정착주민은 선주민에게 소외를 당한 경험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보통 이상의 응답을 보인 반면에, 선주민은 정착주민으로부터 소외당한 경험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보통 이하의 응답을 나타냈다. 또한 정착주민은 선주민의 무시를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보통 이상을 보인 반면에, 선주민은 정착주민의 무시를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보통 이하의 응답을 나타내었다.

한편, 선주민과 정착주민 모두 도민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통 이상 수준으로 응답하였으며, 도내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1점대의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선주민과 정착주민은 서로에 대해 보통 수준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의 공공기관도 보통 수준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요인별 인식 비교

구분		선주민 평균	정착주민 평균	
제도적 요인	B1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착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2.74	2.39
	B2	정착주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착주민 지원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2.67	2.03
	B4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2.72	2.51
	B5	제주특별자치도는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50	2.31
행태적 요인	C1	나는 정착주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2.61	2.57
	C2	나는 정착주민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2.64	2.66
	C3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이라고 생각한다	3.91	3.60
	C4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	3.61	3.66
	C5	나는 지역 내 행사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3.20	2.98
경제적 요인	D1	나는 정착주민(선주민)들로 인하여 도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3.02	2.79

	D2	나는 정착주민(선주민)들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한다	3.68	2.95
	D3	나는 정착주민(선주민)들로 인하여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2.57	2.44
	D4	나는 정착주민(선주민)들로 인하여 수입(급여, 임대수입 등)이 늘었다고 생각한다	2.54	2.41
	D5	나는 현재 도내 경제적 상황(물가 등)에 대해 만족한다	1.97	1.97
사회 문화적 요인	E1	나는 이웃주민(정착주민/선주민)을 신뢰한다	3.13	3.04
	E2	나는 지역사회단체(마을회 등)을 신뢰한다	2.99	2.74
	E3	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을 신뢰한다	3.05	3.11
	E4	나는 고민이 있을 때 이를 상담할 이웃(정착주민/선주민)이 있다	2.88	2.98
	E5	나는 이웃들과 교류가 활발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2.79	2.72
	E6	나는 마을 규범(향약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17	3.03
지역성	F1	나는 제주의 권당문화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3.02	2.65
	F2	나는 권당문화가 가족 간, 이웃 간의 서로 돕는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43	3.30
	F3	나는 제주가 혈연·지역·연고주의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2.67	2.23
	F4	나는 제주의 경조사 문화는 유지해야 될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2.93	2.81
	F5	나는 제주의 공동체문화를 좋아한다	3.18	2.85
선주민 과 정착 주민 간 갈등	H1	나는 집이나 토지 등 다양한 이유로 정착주민과 갈등을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	3.27	3.02
	H2	나는 정착주민(선주민)이 선주민(정착주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68	3.84
	H3	나는 선주민(정착주민)이라는 이유로 정착주민에게 소외당한 경험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다	2.75	3.19
	H4	나는 정착주민(선주민)의 무시를	2.89	3.47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		
	H5	행정기관 또는 마을 리더 등의 중재로 정착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다	2.63	2.51
	H6	갈등상황	3.27	3.52

2) 구조방정식 모형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주민과 정착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채택된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선주민>

연구 가설 2. 행태적 요인은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6-3. 지역성은 경제적 요인과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연구 가설 6-4. 지역성은 사회문화적 요인과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정착주민>

연구 가설 6-3. 지역성은 경제적 요인과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연구 가설 6-4. 지역성은 사회문화적 요인과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선주민과 정착주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해 본 결과, 선주민은 ‘연구 가설 2’, 연구 가설 6-3’, ‘연구 가설 6-4’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반하여, 정착주민은 연구 가설 6-3’, ‘연구 가설 6-4’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선주민과 정착

주민 모두 연구 가설 6-3', '연구 가설 6-4'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점을 통해 볼 때, 선주민과 정착주민 모두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의 관계에 지역성이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V.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영향요인에 관한 것이다. 제주지역에 기존부터 살고 있던 선주민과 제주지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시작을 시작한 정착주민을 대상으로 제도적, 행태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지역성과 갈등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주민은 행태적 요인에서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에 정(+)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선주민에게 지역성은 경제적 요인과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지역성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해서도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정착주민은 제도적, 행태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이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에 정(+)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으나, 지역성이 경제적 요인과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고,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해서도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종합하여 보면,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의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연구 가설2’와 같이 행태적인 요인을 통한 접근 방법도 있겠지만, 선주민과 정착주민 모두에게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성을 활용한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주민과 정착주민이 서로의 역할로 인하여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음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지역공동체의 분위기 속에서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문화적 접근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주민과 정착주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제시된다면 갈등을 줄이고 지역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공공정책에서 비전은 정책이 지향하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로서 철학 또는

이념과 연결된다.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와 도구 선택이라는 지침이 되는 비전이 필요하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어떠한 이론과 철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공동체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서로 협력해야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원칙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남기범 외, 2021).

지역공동체는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체간 역할 구분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3가지 기본방향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원의 역량강화이다. 지역공동체의 주체는 주민들이며, 본 연구에서는 선주민과 정착주민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선주민과 정착주민 각각의 역량 강화를 통한 갈등완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공동체 내에는 리더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선주민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리더를 중심으로 마을의 개발위원회 등이 구성된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지역 내 발생하는 소소한 갈등을 주민이 직접 조정·중재할 수 있는 갈등관리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양성된 전문가들이 각 마을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지역을 할당하여 해당 지역에서 주민조정가로서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사안이 소소한 경우 직접 중재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공동체 자체적으로 갈등에 대한 예방, 관리,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지역공동체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싶어도 정작 쉽게 시간을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민조정가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선주민과 정착주민의 교류에 대한 평가 점수를 도입하여, 사업에 정착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방

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강제적으로 참여인원을 할당하는 것은 다소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강제적인 조정의 노력을 통해 선주민과 정착주민이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향후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동(洞)지역과 읍면지역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은 지역 주민의 참여 부족일 것이다. 특히 동(洞)지역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우, 중간 지원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착주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읍면지역의 경우 정착주민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공동체 운영에 투트랙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존 마을의 향약 등에 의해 운영하는 방식을 존중하며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또는 마을 기본 인프라와 관련하여 행정조직과 협력해야 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착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정착주민도 지역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선주민에게 각인시켜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정착주민 입장에서는 그동안 선주민들이 마을을 위하여 해왔던 일들을 경험해 보도록 하여,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관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이 일종의 중간지원조직이 되어서 다른 지역공동체와의 교류 등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의 애로사항과 같은 부분에 대해 통합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각 마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자치규약에 대한 정비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선주민 276명, 정착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일반 도민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갈등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는 점은 의의가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학술적 연계가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요인들을 대상으로 함축적인 진행이 이루어졌다. 요인을 도출함에 있어서도 보다 폭넓게 접근하여 다양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도출하였다면 보다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탐색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기초로 체계적인 학술적 분석모형의 개념 정립을 하고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유하기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영진(2019). 갈등분쟁 해결 매뉴얼. 서울: 성공회대 출판부.
- 강영훈(2004).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적정성: 제주도 행정계층 및 구역개편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0(2): 185-214.
- 강예선 (2019).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갈등경험과 해소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갈등의 대안적 해결방식 모색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창민·양덕순(2014).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전망. 한국지방행정학보. 11(1): 131-152.
- 구길두 (2021). 지방자치단체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강민·김주경(2023). 공공갈등의 심화가 이념화 전환에 미치는 영향: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30(1): 81-106.
- 김경준·김성수(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3(2): 211-232.
- 김금미·안상수(2008). 남성의 성평등 의식 예언을 위한 모형 통합 : 사회정체성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33-155.
- 김도상 (2016). 우리나라 지역공동체사업의 정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현(2017). 2000년대 이후 문화이주 연구를 위한 새로운 관점 :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12-122.
- 김미량·김민영(2017). 제주 정착주민 정책 현황 연구. 탐라문화. 54: 179-208.
- 김민찬·남재걸(2021). 지역공동체와 중간지원조직 및 정부와의 갈등 분석.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3): 3-33.
- 김석호·신인철·하상용·정기선(2013). 지식공간이론을 이용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용가능성. 한국인구학. 36(1): 1-20.
- 김선기·이소영(2007). 주민주도형 지역만들기 추진 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 김선기(2010).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마을기업) 활성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 김성수·김경준(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3(2): 211-232.
- 김영곤(2016). 공공조직 내 세대 간 갈등 유발요인 분석: 소방조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정(2007). 현대사회에서 지역공동체의 의미와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문화(생태)지향형 지역발전 모델과 공동체 거버넌스. 국토연구원 토론회.
- 김인성·황경수·오윤정(2017). 제주지역 정착이주민의 이주특성 및 이주적응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연구. 47: 127-161.
- 김일순·양정철·황경수(2021). 마을자치와 제주 향약에 관한 연구 : 읍․면 지역 마을 향약의 리민의 자격․권리․의무규정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55: 199-232.
- 김종호·이창훈·신창현(2004). 환경분야 갈등 유형 및 해결방안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보고서.
- 김종후·전형원·강동희(1994).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 집단의 이해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연구. 6(1): 59-86.
- 김주원·조근식(2015). 강원도의 갈등사례 유형별 분석과 갈등관리역량 강화방안. 한국갈등관리연구, 2(1): 51-75.
- 김주호·손주영·이은정(2020). 제주 이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문화융합척도개발의 기초연구. 관광연구. 35(4): 123-142.
- 김진형(2019). 무비판적 공동체 담론의 문제와 대안. 인문콘텐츠. 55: 9-25.
- 김태균·박상혁(2019). 게임이론에 근거한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해결 전략차이 연구. 벤처창업연구. 14(2): 151-163.
- 남기범·이성미·정노화·이혜경·강정향·박미정·진현경·손병덕·손주희·김민주(2021). 이
민정책론. 서울: 윤성사.
- 박명현(2004).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와 상인
집단간의 협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병춘(2012). 지역공동체 성공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공동체 사례연구를 중
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4): 1-26.
- 박은복(2019). 흥동마을의 공동체 유지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는

문.

- 박종관(2012). 지역공동체 형성전략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7): 183-193.
- 박호숙(2000).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서울: 다산출판사.
- 박효준(2023). 공동체사업의 갈등과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 공모형 사업을 중심으로 -. 순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소영진(1999). 딜레마 발생의 사회적 조건. 한국행정학보. 33(1): 185-205.
- 송인하(2010). 마을공동체운동의 성공조건과 과제. 지방자치연구. 14: 33-64.
- 신상준·오영균(2018). 지역주민의 갈등인식과 사회자본 수준이 갈등 해소방안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 -세종시 정부의 갈등해소노력에 대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4): 195-222.
- 심문보(1997).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 집단갈등 현상에 관한 고찰: 춘천시와 홍성군의 폐기물매립장 입지갈등 사례의 비교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4): 231-261.
- 심익섭·심화섭(2016). 마을 만들기 연구경향의 분석과 과제. 국가정책연구. 30(1): 29-48.
- 심준섭·문태훈·허만형(2013). 환경갈등 ADR 역량 비교분석: 한·미·일 3국간 비교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7(2): 1-29.
- 안광일(1994). 정부갈등관리론. 서울: 대명출판사.
- 안성민(1998). 지방정부간 외부성으로 인한 갈등문제에 대한 小考. 지방정부연구. 2(2): 95-109.
- 양덕순·강영순(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71-89.
- 염미경(2019). 제주 이주와 지역사회 변화 그리고 대응. 제주학연구. 51: 181-217.
- 오누리·박성배·강영훈(2022). 제주 정착주민의 재이주 요인에 관한 소고. 인문사회21. 13(1): 2251-2260.
- 오영삼·남성희·윤수경(2014). 내집단의 특성이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통합적 갈등이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2): 424-452.
- 유상춘(2022). 문화귀촌인의 공동체사업 참여와 관계 맺기 : 완주군 고산면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과 문화. 9(2): 29-51.

- 유해운·오창택·권영길(1997).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서울: 선학사.
- 원영희·한정란(2019). 세대갈등과 세대통합에 대한 고찰: 노년교육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노년교육연구. 5(1): 63-85.
- 이기태·하현상(201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보. 25(1): 455-491.
- 이명호(2016). 공동체 모델로서 승가공동체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학논집. 64: 69-90.
- 이상섭(2001).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민음사.
- 이성일·안민지·김용근(2016). 귀농·귀촌의 경험 여부에 따른 갈등 요인과 관리에 대한 인식 차이. 농촌계획. 22(2): 77-87.
- 이재민·권기창(2017). 마을공동체 사업에 나타난 주민들의 삶과 행정의 딜레마 : 칠곡군 마을공동체 사업 사례의 비판적 검토.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163-166.
- 이재열(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학. 8(1): 33-67.
- 이화진(2016). 제주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보고서.
- 장동운(1997). 갈등관리. 서울: 무역경영사.
- 전대욱·박승규·최인수(2012).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전주상(2007).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대전: 배재대학교출판부.
- 전형준(2022). 공동체 갈등의 사례와 유형화 : 귀농·귀촌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PR학회 2022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31-33.
- 정은재(2022). 이주민과 정주민 관점에서 본 지역사회 중심 미술교육 경험의 의미: 다큐멘터리 영화 '그림 그리는 해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0): 817-831.
- 정원식(2020). 정부지원 농촌마을만들기의 성공적 집행의 접근방법: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의 질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24(1): 119-141.
- 조중현(2007). 마을 공동사업 추진과정에서 표출된 주민 간 갈등의 근거 이론적 해석 -농촌체험마을 주민 간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제주특별자치도(2021). 제주 정착주민 기본계획(2022~2025) 최종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2019). 정착주민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 천선영(2013).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공동체성이란 대체 어떤 것인가?: 노인친화적 (신)공동체성 논의를 위한 이론적 배경.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추병완(2011). 접촉 가설에 근거한 반편견 교수 방법. 윤리연구. 81: 239-262.
- 최성섭(2016).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의 적용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혜영(2007). 공공부문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혜영(2011). 정부갈등 해결을 위한 ADR기구 연구: 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11 춘계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한갑운·한갑원(2018).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동화 방안에 대한 연구. 협동조합경영연구. 48: 1-27.
- 한덕용. (2002). 집단행동이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한정란(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5-127.
- 한지은·김석호·공선희·박효민(2021). 제주지역 고령의 선주민이 정착이주민에 대해 가지는 태도 연구. 조사연구. 22(4): 31-53.
- 홍성만·박홍엽. 공공정책갈등 생성과 증폭요인 연구: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6. 1-16.
- 환경부(1996). 環境問題와 관련된 葛藤解消方案에 관한보고서. 서울: 환경부.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Perseus Books.
- Amir, Y. (1976). The role of intergroup contact in the change of prejudice and ethnic relations. In P. A. Katz (ed.), Towards the elimination of racism (pp. 245-308), New York: Pergamon.
- Baron, R. A. (1984). Reducing organizational conflict: An incompatible response

- approac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9(2): 272.
- Brewer, M. B. (1991). The social self: On being the same and different at the same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5). 475-482.
- Brown, L. D. (1983). *Managing Conflict at Organizational Interfaces*. Reading, Mass: Addison Wesley Publishing Co.
- Campbell, D. T. (1965). *Ethnocentric and other altruistic motives*.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Carpenter, S. L. & Kennedy, W. J. (2001). *Managing public disputes: A practical guide for government, business, and citizens' groups*. Jossey-Bass.
- Carnevale, P. J. D. & Isen A. M. (1986). The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and Visual Access on the Discovery of Integrative Solutions in Bilateral Negoti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37(1): 1-13.
- Chaskin, R. J. (1997). Perspectives on Neighborhood and Community: A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Service Review*. 71(4): 527-548.
- Davis, J. H. (1959). A formal interpretation of the theory of relative deprivation. *Sociometry*, 22(4), 280-296.
- Dixon, J., Durrheim, K., & Tredoux, C. G. (2005). Beyond the optimal contact strategy: A reality check for the contact hypothesis. *American Psychologist*, 60, 697-711.
- Dovidio, J. F. (2001). On the nature of contemporary prejudice: The third wave. *Journal of Social Issues*, 57(4), 829-849.
- Dubrin, a. J. (1984). *Human relations-A. Job Oriented approach*. 3rd. Reston publishing company. Ind.
- Edward, J. A. (1968). Conflict: psychology aspect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3)*, New York: Mcmillian and Free Press.
- Fink, C. F. (1968). Some conceptual Difficulties in the Theory of Social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12, No. 4
- Forsyth, D. R. (1983). *An Introduction to Group Dynamics*, Brooks/Cole

- Publishing Company, 서울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실 역, 103-118.
- Hillery, G.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 Hogg, M. A. (2003). Intergroup relations. In J. Delamater(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479-501.
- Hogg, M. A. (2013). Intergroup relations. In J. DeLamater & A. Ward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nd ed.*, New York: Springer, pp.599-658.
- Gupta, D. K.․Singh, H., & Sprague, T. (1993). Government coercion of dissidents: deterrence or provoc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7(2): 301-339
- Houghton Mifflin (2000)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4th Edition, 2000.
- Jackson, J. W. (1993). 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 A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Psychological Record*, 43(3), 395-415.
- Krauss, E. S. (1996). Conflict in the Diet: Toward Conflict Management in Parliamentary Politics, in E. S. Krauss (eds), *Conflict in jap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MacIver, R. M. (1917). *Community: A sociological study*. London: Macmillan.
- Mattessich, P. & Monsey, M. (2004). *Community Building: What Makes It Work*, Wilder Foundation.
- Mnookin, R. (1998).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arvard Law School John M. Olin Center for Law, Economic and Business Discussion Paper Series, 232.
- Moore, J.F (1996). *The Death of Competition: Leadership & Strategy in the Age of Business Ecosystems*. New York: Harper Business.
- Myers, D. G. (2005). *Social psychology*, 8th ed. Boston: McGraw Hill.
- Poplin, D. E. (1972). *Communities: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New York: MacMillan
- Pondy, L. R. (1967). *Organizational Conflict: Concept and Model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12, No. 2.

- Rahim, M. A. (2002). Toward a Theory of Managing Organiz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13(3): 206-235.
- Robbin, S. P. (1974). *The Management Organional Conflict*.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Robbins, S. T. (1983). *Organization Theory: The Structure and Design of Organizations*. New Jerse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 Robey, Daniel (1982). *Designing Organization: a Macro Perspective*, Homewood Richard D Irwin. Inc.
- Ross, M. H. (1993). *The Management of Conflict: Interpretations ans Interest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Runciman, W. G. (1966).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justice: A study ofattitudes to social inequality in twentieth century Englan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aeki, S., & Matsubara, R. (2002). *Plan of new market society-trust and fair economic social image*. Tokyo; vision of the social science library, New world Inc.
- Sarason, S. B. (1974).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Prospects for a Community Psych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 Simon, Herbert A. & March, James G. (1958). *Organization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Stephan, W. G., & Finlay, K. (1999). The role of empathy in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55 (4), 729-743.
- Stephan, W. G., & Stephan, C. W. (1996). Predicting prejudi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3-4): 409-426.
- Stouffer, S. A., Suchman, E. A., Devinney, L. C., Star, S. A., & R. M. Jr.Williams. (1949). *The American soldiers: Adjustment during army life(Studies in social psychology in World War II)*.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jfel, H. (1974).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behavior. *Social Science*

- Information. 13(2), 65-93.
- Tajfel, H. (1978). Interindividual and intergroup behaviour. In H. Tajfel (ed.), *Differentiation between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27-60), London: Academic Press.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33-47), Monterey, CA: Brooks/Cole
- Thomas, K. W. & Schmidt, W. H. (1976). A survey of managerial interests with respect to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9(2): 315-318.
- Townsend.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London: Allen Lane & Penguin Books.
- Vala, J., Pereira, C., & A. Ramos. (2006). Racial prejudice, threat perception and opposition to immigration: A comparative analysis. *Portuguese Journal of Social Science*, 5(2), 119-140.
- Walton, R. E. (1987). *Theory of Conflict in Lateral Organizations Relationship*, in J. R. Lawrence(ed.), *Operation and Social Science*, London, Tavistock Publication.

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ed by Conflict
between Native Residents and Migrants
for the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ies
- Focusing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Myung-Sang Kim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launch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n July 1, 2006, the Jeju area had exceptional autonomy in all areas of autonomous administration, including legislation, finance, organization, and personnel, resulting in major changes in the local community. There was also a big change in the population, and in 2005, before the launch of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popul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557,235, but as of 2022, the popul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creased significantly to 678,159. These changes have attracted great attention from the public since the 2010s as entertainers' lives in Jeju have been introduced through the media, and the influx of population to Jeju has increased further as people have dreamed and admired 'Jeju Life'. However, the net inflow of population into Jeju, which has continued since 2011,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it will be the first time in eight years in 2019 and an increase in net outflow. In the 'Jeju Migrant Basic Plan (2022-2025)' announced in 2021, more than 70% of the migrants were relocating to other regions within four years, and the outflow of the population in their 20s and 30s, the core production population, was found to be serious. In addition, only 21.1% of migrants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settle in Jeju, and the rest were likely to migrate aga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factors influencing conflict between native residents and migrants in Jeju and to use them to prevent and manage conflicts to achieve the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ies. To this end,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276 people, including 276

natives and 100 migrant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conflict were derived through SPSS 25 and AMOS statistical progra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oth native residents and migrants showe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ve residents and migrants in terms of economic and socio-cultural factors.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nflict between native residents and migrants in order to revitalize the community in the Jeju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important basic data in developing policies related to the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ies through native residents and migrants. However, there is also a limitation in that a survey was conducted for general resident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conflicts occurred in this study. I think that if research is conducted on the areas where conflicts between native residents and migrants have occurred in the future, it will be helpful in research on the harmony of local communities

Key Wor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nflict influencing factors, local community, native residents, migrants

□ 설문지(선주민용)

ID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영향요인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김명상(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제주지역 선주민과 정착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는 본 연구의 결정적인 자료가 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다소 번거롭더라도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신다면 본 연구는 물론 향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 처리에만 사용될 것이며, 조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연구자: 김명상(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연락처: 010-2398-5547(이메일: heiskms@jejunu.ac.kr)
지도교수: 양덕순·김주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SQ. 인구통계적 특성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연령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20세 ~ 29세 ② 30세 ~ 39세 ③ 40세 ~ 49세 ④ 50세 ~ 59세
⑤ 60세 ~ 69세 ⑥ 70세 이상

SQ3.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① 제주시 동(洞)지역 ② 제주시 읍면지역 ③ 서귀포시 동(洞)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SQ4. 귀댁의 **가구원 수**(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총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SQ5.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기혼/사실혼(동거) ② 미혼 ③ 이혼/별거/사별

SQ6.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2,3년제) 재학/졸업
⑤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졸업 ④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A. 제주도민으로서의 대한 인식

A1. 귀하는 본인을 제주도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A2로 이동) ② 아니오(A3으로 이동)

A2. 귀하는 본인이 제주도민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제주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②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제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③ 제주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④ 제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주소도 두고 있지 않지만,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A3. 귀하는 본인이 제주도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제주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난 타지역의 이주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②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③ 제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④ 제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주소도 두고 있지 않지만,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A4. 귀하는 제주도민이라고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②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③ 일정기간 제주에 거주했었는지 있는지 여부
④ 부모님, 조부모님 등이 살고 있거나 살았던 경험 여부

A5. 귀하의 제주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5년 이내 ② 5년 ~ 10년 ③ 10년 ~ 20년 ④ 20년 이상

A6. 귀하는 제주에 거주하면서 다음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주거 환경	①	②	③	④	⑤
생활편의시설	①	②	③	④	⑤
교육	①	②	③	④	⑤
대중교통	①	②	③	④	⑤
문화·여가 시설	①	②	③	④	⑤
의료시설	①	②	③	④	⑤
치안	①	②	③	④	⑤
자연환경	①	②	③	④	⑤

A7. 귀하께서는 마을회의나 행사(반상회, 체육대회 등)에 어느 정도 참석하십니까?

참여하지 않음	시간되면 참여	때때로 참여	대부분 참여	반드시 참여
①	②	③	④	⑤

B. 제도적 요인

※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법과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제도적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B1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착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B2	정착주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착주민 지원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B4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B5	제주특별자치도는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C. 행태적 요인

※ 다음은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행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행태적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C1	나는 정착주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C2	나는 정착주민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C3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C4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C5	나는 지역 내 행사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D. 경제적 요인

※ 다음은 지역사회 내 경제적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경제적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D1	나는 정착주민들로 인하여 도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D2	나는 정착주민들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D3	나는 정착주민들로 인하여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D4	나는 정착주민들로 인하여 수입(급여, 임대 수입 등)이 늘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D5	나는 현재 도내 경제적 상황(물가 등)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E. 사회문화적 요인

※ 다음은 지역사회 내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사회문화적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1	나는 이웃주민(정착주민)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E2	나는 지역사회단체(마을회 등)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E3	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E4	나는 고민이 있을 때 이를 상담할 이웃(정착주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5	나는 이웃들과 교류가 활발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6	나는 마을 규범(향약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F. 지역성

※ 다음은 제주의 지역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지역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F1	나는 제주의 권당문화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F2	나는 권당문화가 가족 간, 이웃 간의 서로 돕는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F3	나는 제주가 혈연·지역·연고주의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F4	나는 제주의 경조사 문화는 유지해야 될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F5	나는 제주의 공동체문화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G. 지역에 대한 애착

※ 다음은 제주지역에 대한 애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지역에 대한 애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G1	나는 제주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G2	나는 제주가 많은 가치를 가진 곳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G3	나는 제주가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G4	나는 지역의 새로운 소식을 알기 위해 노력한다(뉴스, 신문, 소식지 등의 정기적인 시청/구독)	①	②	③	④	⑤
G5	나는 앞으로도 계속 제주에 살 예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H.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

※ 다음은 선주민과 정착주민 사이의 갈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H1	나는 집이나 토지 등 다양한 이유로 정착주민과 갈등을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H2	나는 정착주민이 선주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H3	나는 선주민이라는 이유로 정착주민에게 소외당한 경험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H4	나는 정착주민의 무시를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H5	행정기관 또는 마을 리더 등의 중재로 정착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H6. 귀하는 제주지역의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갈등이 없다	별로 갈등이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갈등이 있는 편이다	매우 갈등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지(정착주민용)

ID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영향요인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김명상(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제주지역 선주민과 정착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는 본 연구의 결정적인 자료가 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다소 번거롭더라도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신다면 본 연구는 물론 향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 처리에만 사용될 것이며, 조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연구자: 김명상(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연락처: 010-2398-5547(이메일: heiskms@jejunu.ac.kr)
지도교수: 양덕순·김주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SQ. 인구통계적 특성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연령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20세 ~ 29세 ② 30세 ~ 39세 ③ 40세 ~ 49세 ④ 50세 ~ 59세
⑤ 60세 ~ 69세 ⑥ 70세 이상

SQ3.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① 제주시 동(洞)지역 ② 제주시 읍면지역 ③ 서귀포시 동(洞)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SQ4. 귀댁의 **가구원 수**(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총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SQ5.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기혼/사실혼(동거) ② 미혼 ③ 이혼/별거/사별

SQ6.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2,3년제) 재학/졸업
⑤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졸업 ④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A. 제주도민으로서의 대한 인식

A1. 귀하는 본인을 제주도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A2로 이동) ② 아니오(A3으로 이동)

A2. 귀하는 본인이 제주도민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제주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②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제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③ 제주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④ 제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주소도 두고 있지 않지만,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A3. 귀하는 본인이 제주도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제주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난 타지역의 이주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②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③ 제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④ 제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주소도 두고 있지 않지만,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A4. 귀하는 제주도민이라고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②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③ 일정기간 제주에 거주했었는지 있는지 여부
④ 부모님, 조부모님 등이 살고 있거나 살았던 경험 여부

A5. 귀하의 제주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5년 이내 ② 5년 ~ 10년 ③ 10년 ~ 20년 ④ 20년 이상

A6. 귀하는 제주에 거주하면서 다음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주거 환경	①	②	③	④	⑤
생활편의시설	①	②	③	④	⑤
교육	①	②	③	④	⑤
대중교통	①	②	③	④	⑤
문화·여가 시설	①	②	③	④	⑤
의료시설	①	②	③	④	⑤
치안	①	②	③	④	⑤
자연환경	①	②	③	④	⑤

A7. 귀하께서는 마을회의나 행사(반상회, 체육대회 등)에 어느 정도 참석하십니까?

참여하지 않음	시간되면 참여	때때로 참여	대부분 참여	반드시 참여
①	②	③	④	⑤

A8. 귀하가 제주로 이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 ②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 ③ 일정기간 제주에 거주했었는지 있는지 여부
- ④ 부모님, 조부모님 등이 살고 있거나 살았던 경험 여부

B. 제도적 요인

※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법과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제도적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B1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착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B2	정착주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착주민 지원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B4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B5	제주특별자치도는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C. 행태적 요인

※ 다음은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행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행태적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C1	나는 선주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C2	나는 선주민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C3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C4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C5	나는 지역 내 행사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D. 경제적 요인

※ 다음은 지역사회 내 경제적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경제적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D1	나는 선주민들로 인하여 도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D2	나는 선주민들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D3	나는 선주민들로 인하여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D4	나는 선주민들로 인하여 수입(급여, 임대수입 등)이 늘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D5	나는 현재 도내 경제적 상황(물가 등)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E. 사회문화적 요인

※ 다음은 지역사회 내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사회문화적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1	나는 이웃주민(선주민)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E2	나는 지역사회단체(마을회 등)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E3	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E4	나는 고민이 있을 때 이를 상담할 이웃(선주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5	나는 이웃들과 교류가 활발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6	나는 마을 규범(향약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F. 지역성

※ 다음은 제주의 지역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지역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F1	나는 제주의 권당문화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F2	나는 권당문화가 가족 간, 이웃 간의 서로 돕는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F3	나는 제주가 혈연·지역·연고주의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F4	나는 제주의 경조사 문화는 유지해야 될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F5	나는 제주의 공동체문화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G. 지역에 대한 애착

※ 다음은 제주지역에 대한 애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지역에 대한 애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F1	나는 제주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F2	나는 제주가 많은 가치를 가진 곳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F3	나는 제주가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F4	나는 지역의 새로운 소식을 알기 위해 노력한다(뉴스, 신문, 소식지 등의 정기적인 시청/구독)	①	②	③	④	⑤
F5	나는 앞으로도 계속 제주에 살 예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H.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

※ 다음은 선주민과 정착주민 사이의 갈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H1	나는 집이나 토지 등 다양한 이유로 선주민과 갈등을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H2	나는 선주민이 정착주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H3	나는 정착주민이라는 이유로 선주민에게 소외당한 경험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H4	나는 선주민의 텃세를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H5	행정기관 또는 마을 리더 등의 중재로 선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H6. 귀하는 제주지역의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 갈등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갈등이 없다	별로 갈등이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갈등이 있는 편이다	매우 갈등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 수고하셨습니다.